



SINCE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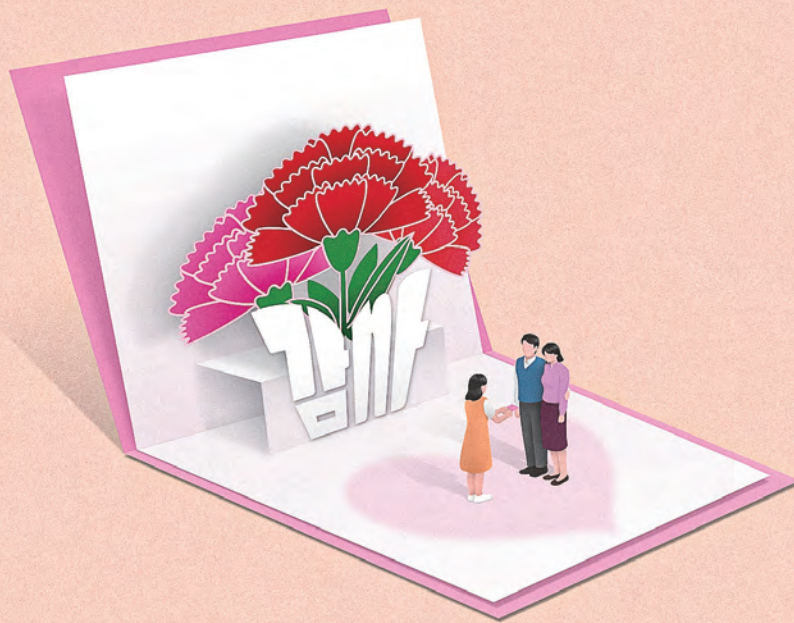


#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3. 05**  
**VOL. 678**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어렵고 때론 쑥스럽지만  
정말 중요하지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감사의 인사를 두루 전해봅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 국회보

since 1949

2023. May  
Vol. 678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3년 5월 1일

발행인

이광재 국회의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홍형선 위원장(사무차장)

박태형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수옥 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위원(법제실장)

정지은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정환철 위원(공보기획관)

김형진 간사(공보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한주연(보좌관), 윤희진(비서관), 이구형(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15

## 04 지금 국회에서는

- 선거제 개선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 국회 출입기자 96.2% '선거제도 개편' 공감
- 청년과 국회의원, 한자리에 모여 선거제 개혁 관련 토론 펼쳐
- 김진표 국회의장, MS 부회장 접견 및 AI 강연 청취
- 국회의사무처,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인플루언서 홍보대사 간담회

## 15 특집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외교 활동과 경제효과

- 김진표 국회의장,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접견 및 유치결의문 전달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박람회 개최지 방문 등 의회외교 펼쳐  
\_안병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간사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외교 동향 \_황승기 국회의사무처 국제국장
- 준비된 부산(BUSAN is Ready),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발자취와 현지실사 \_이경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지원단장
-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부산의 진심 \_조유장 부산시 2030 엑스포추진본부장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의미와 경제 효과 \_김이태 부산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

## 28 위원장에게 듣는다 \_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백년지대계 교육, 미래사회 대비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할 것"

## 30 길에서 길을 찾다 \_전재수 의원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부산 북구강서구

## 34 의원의 좌우명 \_조해진 의원

꾸준함의 힘, 반복의 힘, 축적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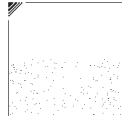
## 36 칭찬합시다 \_이원욱 의원

박덕흠 의원이 이원욱 의원을 칭찬합니다

## 38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용혜인 의원

국민의 안전, 생명과 존엄을 위하여

# CONTENTS



28



30



34



36



38

**40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농식품바우처 활성화, 교원양성 수급, 지방대 경쟁력 강화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49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만첩홍도

**50 함께하는 국회**  
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토론회

**52 법률, 시대를 읽다**  
공직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  
\_권영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54 주재관 리포트**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2023년 양회 참관기  
\_채미강 중국 주재관

**57 이달의 청원**

**58 위원회는 지금**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 등 열려

**62 국회 뉴스**

**66 법 시행 그 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8 새 법률 소개**  
국회, 본회의 열어 법률안 62건 의결

**72 만화**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4 4차산업혁명시대 살아가기**  
2차전지, 에너지 혁명을 이끈다 \_김동철 박사

**76 국회 사람들**  
'체계·자구 심사, 탄핵 소추 등 법사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쌓았죠' \_장승훈 행정관

**78 이달의 서평**  
마스크 파노라마 \_박기범 선임연구위원

**80 고전에서 읽는 지혜**  
세계 3대 중국 여행기의 하나 '표해록(漂海錄)'  
\_박석무 석좌교수

**82 국회 미술관**  
못 생명과 만물을 공경하는 대인접물(待人接物)의 마음  
\_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

**85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86 속기록으로 본 의정소사**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인식과 논의는 언제부터?  
\_김은경 속기사무관

**88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강화 함허동천 \_유인근 여행칼럼니스트

**92 생활 속 우리말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만드는 어조의 변화  
\_김풍기 교수

**94 정치 관련 주요 일지**

## 선거제 개선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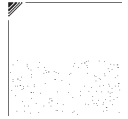
4일간 국회의원 100명 질의 및 토론 실시



4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선거제 개선 논의를 위한 제405회국회(임시회)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이하 전원위)를 개최했다. 이번 전원위는 지난 3월 29일 박홍근·주호영·이은주·조정훈 의원 외 294인으로 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정치개

혁특별위원장 제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 개최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뤄졌다. 전원위가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위해 개최된 것은 19년 만으로, 이전 전원위는 지난 2003년~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을 두고 열린 바 있다.



4일간 열린 전원위에서는 총 100명(더불어민주당 53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 9명)의 국회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포함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골자로 하되 개별 의원들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선거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의원 수는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나뉘었다.

### 정치양극화 해소, 지방소멸 대응,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선거제 개선 논의

4월 10일 시작된 제1차 전원위 회의에서는 총 28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의 국회의원이 4시간에 걸쳐 토론에 참여했다. 각 교섭단체의 첫 토론자로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최형두(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으며, 비교섭단체에서는 심상정(정의당),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등이 발언했다.

의원들은 발언 시간 7분 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3개의 복수안을 포함해 도농복합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제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해 각자의 소신을 피력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 또는 확대 및 지역대표성 보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개선, 정치양극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주의 완화 등을 위해 국민의 선호에 기반한 정치적·사회적 합

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에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

김영주 전원위원장은 “높은 국민적 관심과 열망에 응답해야 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 100여 명의 토론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11일 열린 제2차 전원위에서는 장동혁(국민의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류호정(정의당) 의원 등 총 28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국민이 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자의 견해를 가감 없이 개진했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의석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시대적 한계에 봉착한 비례대표제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견해가 여야 간 엇갈린 가운데,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주류적 의견과 차별화되는 소신을 피력하며 비례대표의 확대 또는 축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대표성 보장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문제에 관해서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특단의 대책마련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제3차 전원위, 여야 추천 선거제도 전문가도 함께 토론에 참여

4월 12일 열린 제3차 전원위에서는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선거제도 전문가와 함께 24명의 국회의원이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해 선거제도 개선안을 하나로 압축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4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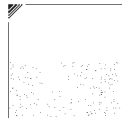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박형수(국민의힘), 강은미(정의당), 민형배(무소속) 의원 등 총 24명(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 2명)의 의원과 여야가 추천한 4명[김형철(성공회대), 박명호(동국대), 이현출(건국대), 지병근(조선대)]의 교수 등 선거제도 전문가가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질의·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을 담보하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에서의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결과를 고려할 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비례성 및 대표성 제고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한편 소선거구제와 관련해서도 승자독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극한적 정치 갈등을 야기한다는 다수의 지적과 함께,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의 조응성, 높은 국민 선호도와 인지도 및 책임정치 구현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그 제도적 한계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 밖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중복입후보제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각 제도의 장·단점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4월 13일에 열린 제4차 전원위에서는 정희용(국민의힘),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성희(진보당) 의원 등 20명(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 3명)의 국회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 여야, 선거제 문제점 해결에 공감대 형성

나흘 간의 일정을 종합하는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토론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던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및 개방명부식 대선선거제

각각의 효과와 장·단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계속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오가며,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전 위원위원회 본연의 취지에 걸맞게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각 정당 내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고, 지역대표성 보장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문제에서는 상당수의 여야 의원이 인식을 같이했다. 🏠

## 전원위원회 발언 분석 결과 발표

한편, 전원위 종료 후 여야 의원 100인의 전원위 발언을 분석한 결과, 지역구 선출방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39.6%)를,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44.7%)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방명부식 대선선거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경우 권역별(48인 선호, 전국단위 선호 23인) 실시와 개방형 정당명부제(14인 선호, 폐쇄형 선호 3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결합방식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제(56.6%)를,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제(42.1%)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양당 모두에서 청년·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원위 질의·토론에서 나온 논의 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됐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①비례성 ②대표성 ③다양성 ④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⑤국민수용성 등으로 제시됐고, 선거제도 구

성요소로는 ①소선거구제 ②도농복합선거구제 ③(개방명부식)대선거구제 ④권역단위 비례제 ⑤중복입후보제 ⑥비례 축소 ⑦비례 확대 ⑧의원정수 확대 ⑨의원정수 축소 등이 제안됐다.

전원위는 향후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또는 워킹그룹 작업 등 다양한 협의체널을 구성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정안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전원위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사무처는 4월 22일 국회에서 청년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5월 중 국민 대상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회 출입기자 96.2% ‘선거제도 개편’ 공감

4월 11~12일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회를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 중 96.2%가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장실이 전원위원회가 진행된 4월 11일부터 이틀간 국회의 선거제도 심사과정을 취재해 온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1,150명)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웹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자 609명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로 절반이 넘었고,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도 39.7%에 달했다. 응답자 대부분(96.2%)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 개편 필요 이유 1위는 ‘정치양극화 해소’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복수 응답 허용)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67.5%는 정치양극화 해소를, 49.9%는 국민 다양성 반영을, 46.5%는 정책경쟁을 꼽아 현 선거제도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이념적 극한대립에 대한 문제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제 개편방향으로는 응답자의 60.6%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 역시 77.3%로 높게 나타났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정치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지역소멸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9.3%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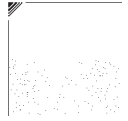
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응답자의 80%는 종전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는 전국단위(39.9%)보다 권역단위(60.1%) 방식을 선호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의원 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4%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자는 응답이 55.1%,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자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또, 유권자가 정당뿐 아니라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은 80.8%에 달해, 현재 정당이 순위를 결정해 제출하는 방식(폐쇄형 명부제)보다 비례대표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비례후보를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 선호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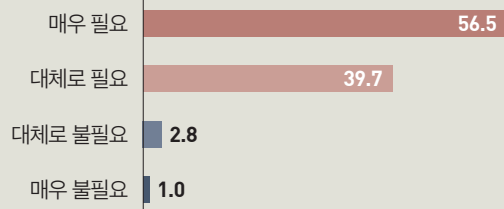
한편, 3월 22일 정치개혁특위가 채택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3개안 가운데 절반 이상(51.6%)이 1안(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2안(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과 3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선택한 응답은 각각 21.0%, 22.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pm 2.7\%$ p, 응답률은 52.96%(1,150명 중 609명 응답)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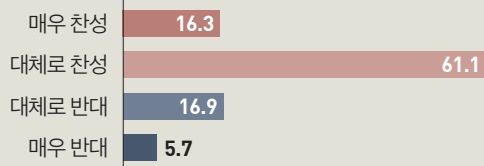


## 정치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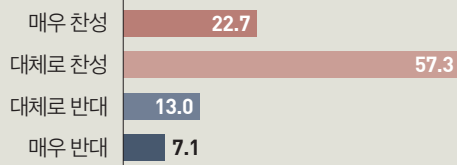
### 1. 선거제도 개편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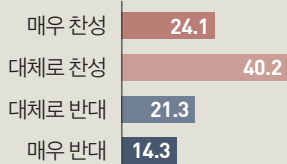
### 2.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 3.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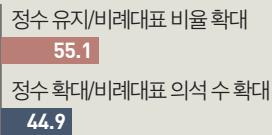


### 4.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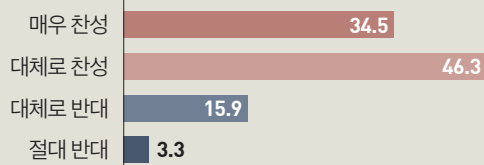


### 4-1.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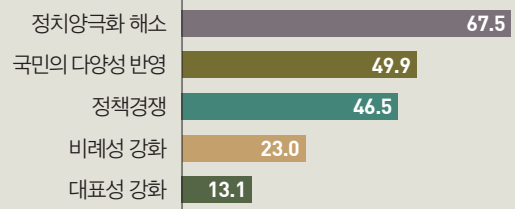
(Q4 찬성 응답자 392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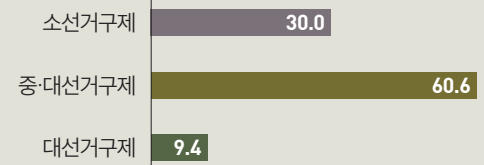
### 5. 개방형 명부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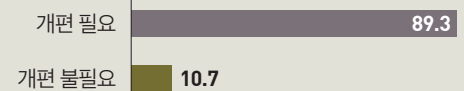
### 6. 선거제도 개편 필요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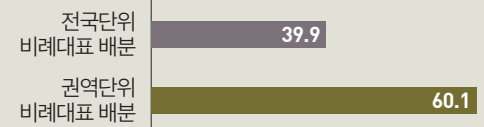
### 7. 국회의원 지역구선거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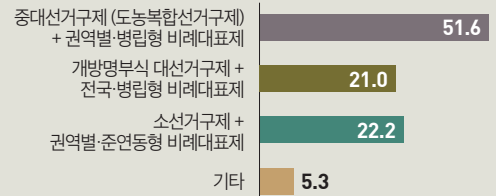
### 8.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 여부



### 9. 비례대표 배분 선호 방식



### 10. 선거제도 개편안



※ 백분율 집계인 경우,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99.9% 또는 100.1%로 나타나는 라운딩에러(반올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청년과 국회의원, 한자리에 모여 선거제 개혁 관련 토론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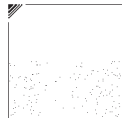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맞장(MZ) 한 판-청년vs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난상토론'이 열렸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4월 22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 및 방향과 지역구·비례대표 선거방식, 의원 정수 등을 주제로 '국회의원과 맞장(MZ) 한 판-청년vs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난상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관용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학생 및 직장인 등 20~30대 MZ세대 청년 50여 명과 이

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토론자로 참가해 1시간 40분 동안 토론을 펼쳤다.

총 두 개의 라운드 형식으로 구성된 토론은 의원 간 토론에 이어 의원 대 청년 토론으로 진행됐다. 의원 간 토론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 및 방향, 지역구 선거방식(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여부, 의원 정수를 주



제로 한 토론이 이뤄졌다.

의원들은 소선거구제에서 사표 발생률이 무려 50%를 육박하고 있어 유권자의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제 개혁은 소수당과 청년·여성의 참여 등 대표성과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허은아 의원은 “정치는 국민에 줄서는 것이며, 국민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며 현재의 51% 다수가 49%를 소수로 만드는 소선거구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탄희 의원도 “우리의 선거제도는 반사이익의 구조”로 상대를 혐오하는 정치로 만들고 있어, 4~5인 이상의 개방형 비례식 대선거구제로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호정 의원은 “내가 찍은 대로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비례성 강화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진 의원 대 MZ 토론에서 MZ 청년들은 중대선거구제는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돈 없고, 조직 없고, 인지도 없는’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양극화 정치를 부추기는 저격수 역할을 한다는 일명 ‘진영 전사론’ 등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을 지적하면서 비례대표 확대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을 높여 정치 양극화와 다당제에 의한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제도 활용에 있어 위성정당 불참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나 규범적 부분 개선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류호정 의원과 허은아 의원은 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통해 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다음으로 비례대표 선거방식, 지역·비례 비중조정 등을 주제로 권역별 대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거 방식과 개방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비례 중복입후보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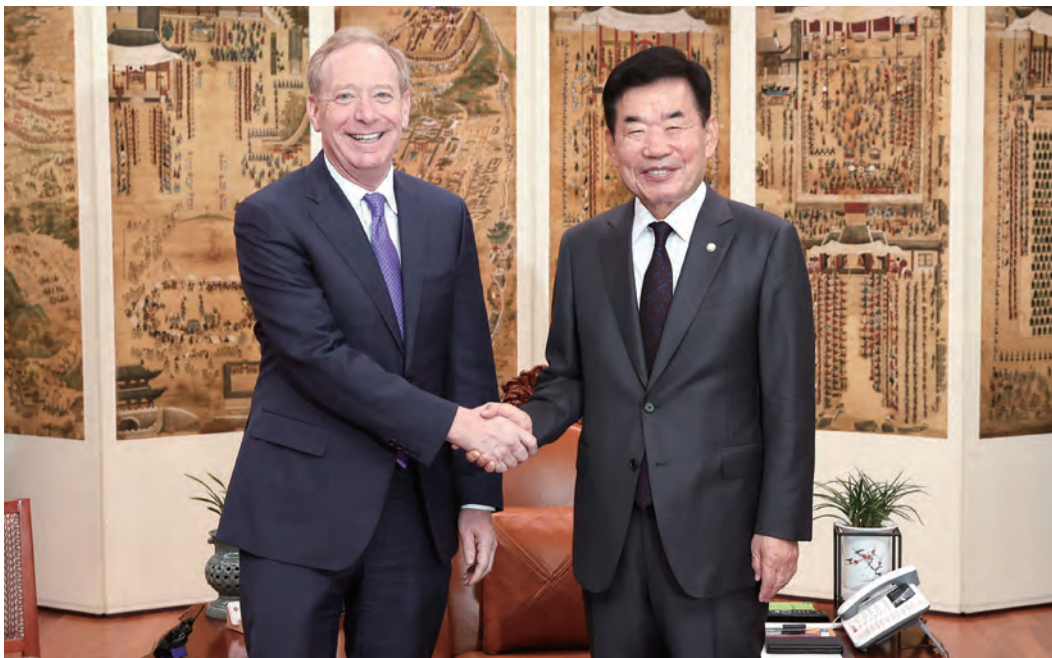
이탄희 의원과 허은아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의 환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방형 비례대표제 등을 강조했다.

청년들은 지방소멸 등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선거구 기형화 문제,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의석수와 득표율의 불비례성 개선 방안 및 위성정당 창당 금지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가 마무리될 즈음 정관용 교수는 “선거제도를 성공적으로 개혁한 나라는 뉴질랜드인데, 이 나라는 선거제 개혁 이후 경제적 성장도 함께 이뤄냈다”고 말하면서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활발한 개헌 운동을 벌여온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상임대표 이상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회는 앞으로 선거제를 성공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MZ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와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관련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 김진표 국회의장, MS 부회장 접견 및 AI 강연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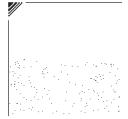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이 4월 18일 의장 집무실에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18일 의장집무실에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을 접견하고 ‘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를 주제로 한 스미스 부회장의 강연에 참석했다. 이번 강연은 스미스 부회장 방한을 계기로 챗GPT(ChatGPT)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회 이해도 및 정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후발주

자로서 민간 및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확산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폭넓은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국회가 입법을 할 때에는 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규제 수준을 찾아야 한다”며 산업 육성과 규제 간 조화를 강조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4월 18일 국회에서 '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스미스 부회장 역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AI 등 신기술로 경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일반 사용자들의 기술 활용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기술 제공 혜택 극대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함께 기술의 남용 가능성을 대비한 보호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접견에 이어 국회의원 및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미스 부회장의 강연을 듣고 김영욱 Hello AI 대표의 챗GPT(ChatGPT) 시연을 참관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의 진화는 더 빨라질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한층 격렬해질 것”이라며 “글로벌 AI 경쟁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가 되려면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을 감시하고 차

별하는 기술이 되거나 인류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며 “오늘 강연이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국회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강연에서 “AI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을 가능케 하는 새롭고 강력한 도구”라며 최신 AI 기술의 작동원리와 함께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MS의 노력 및 AI 기술에 필요한 안전장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접견에는 MS 측에서 이지은 한국MS 대표, 캐롤 앤 브라운 MS 부회장 비서실장, 윤찬 한국MS 정책협력법무실장 등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 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 국회사무처,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인플루언서 홍보대사 간담회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4월 3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 인플루언서 홍보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부산 2030 세계박람회의 유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쳤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박재호 국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장은 4월 3일 홍보대사로 위촉된 40여 명의 글로벌 인플루언서들과 간담회를 갖고 뉴미디어를 통한 부산 세계박람회의 홍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재호 특위위원장은 세계박람회의 의의, 박람회 유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위촉되는 인플루언서 홍보대사의 활동 방향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박람회 실사단의 국회 방문, 다른 유치 희망국들과의 경쟁 현황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람회를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 1인미디어 및 SNS 채널 등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집중 홍보' 전략, 실사단의 국회 방문 시 이들에 대한 유치 기원 결의문 전달 등 박람회 유치지원을 위한 국회의 대응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간담회와 함께 인플루언서 홍보대사들에 대한 위촉식도 열렸다. 앞으로도 국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국회사무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박람회 유치 필요성을 전세계 SNS 구독자에게 널리 전파해 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 특집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외교 활동과 경제효과

오는 11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국제박람회기구(BIE)가 4월 초 방한해 국회를 방문하고 부산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국회를 포함해 '민·관 합동 원팀'으로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계박람회 유치 준비와  
의회외교 현황, 경제적 효과 등을 알아봤습니다.

<편집자주>



김진표 국회의장,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접견 및 유치결의문 전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박람회 개최지 방문 등 의회외교 펼쳐

안병길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간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외교 동향

황승기 국회사무처 국제국장

준비된 부산(BUSAN is Ready),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발자취와 현지실사

이경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지원단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부산의 진심

조유장 부산시 2030 엑스포추진본부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의미와 경제 효과

김이태 부산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



## 김진표 국회의장,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접견 및 유치결의문 전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4월 3일 본회의장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장인 파트릭 슈페히트 행정예산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여야 한마음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망… 법률·예산 지원 약속”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3일 국회접견실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접견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본회의를 열어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전달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관 외벽과 경내 가로등 등에 ‘국회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김 의장은 실사단을 직접 영접하며 환대했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 한마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하단 가운데)이 4월 3일 국회 본관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단 왼쪽부터 윤상직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영주 국회부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재호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위원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열망하고 있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되면 즉각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법률적·예산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부산에 가면 시민들의 강력한 유치 열망을 보다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관문이자 동북아 중심부에 있는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와 영화·게임 등 문화 콘텐츠, 다수 대형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은 박람회가 지향하는 인류의 진보와 꿈이라는 목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라며 “우리 국민들의 부산박람회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매우 크며, 이번 실사를 통해 행사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부산은 6·25전쟁 때 피란민들이 살던 곳에서 성공 신화를 이끌어낸 곳으로 인

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극복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다”며 “정당을 초월해 노력하고 있으니 부산엑스포 유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실사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실사단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현지실사를 앞두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점견에는 실사단 측에서 슈페히트 실사단장, 케르켄테즈 사무총장, 아이작 세인트키즈네비스 대표, 잘츠리 스위스 대표, 나기 루마니아 대표 등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재호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박람회 개최지 방문 등 의회외교 펼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최종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 초, 한국을 방문한 BIE 실사단이 부산의 준비상황을 보고 찬사를 보냈다고는 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천문학적 규모의 오일머니를 앞세워 개발도상국들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던 메가이벤트를 유치해 국가 성장의 주춧돌로 만들어 온 저력이 있다.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당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이 외쳤다. “서울 52, 나고야 27.”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당시에든 국제 여론은 나고야 쪽의 우세를 점쳤다. 한국 실무단이 바덴바덴에 입성하기 직전에 점검한 결과, 총회 투표자 82명 가운데 서울을 지지하는 인원은 26명에 불과했었다고 한다. 나고야의 백중세 혹은 우세 분위기는 개최지 결정 당일에 반전됐다. 프레젠테이션과 컨벤션에서 한국이 잇달아 우세를 점하면서 상황을 호전시킨 것이다.

부산이 열세에 놓여 있다고 평가받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도 개최지가 결정 나는 당일에 극적인 반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교역량과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어야 할 때다. 각국 지도층과의 회담, 주한대사 접견, BIE 회원국 유력인사의 방한 등 기회가 생겨날 때마다 세계박람회 유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박람회 유치 설득을 위해서는 아젠다가 국가 안보 중심에서 경제 거버넌스, 기후변화, 인권, 공적개발원조(ODA) 등으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중요한 외교 주체로 부상하게 된다. 본래 의회외교는 정부 외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간사



교의 대체제보다는 보완제의 성격이 강하다. 헌법상 국가 외교는 국회가 아닌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기능이 다원화·다양화될수록 의회를 통한 교류나 교섭이 생각지도 않은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의원내각제형 국가이기에 내각과 의회가 정치와 정책을 함께 펼쳐나간다. 미국 의회도 상·하원을 막론하고 외교정책에 대한 참여도와 결정도가 높다. 이 점들을 활용해 의회외교로 한국의 이해를 대변하면서도 비공식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상대국의 의회 및 정부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작년 2월 출범한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2020두바이세계박람회 현장에 찾아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세계박람회 유치에 필요한 정보 획득과 함께 시설 현황을 검토했다. 작년 12월에는 헝가리·아제르바이잔·조지아도 방문해 각 국가별 협력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작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BIE총회에서 개최 경쟁국 간 3차 PT가 진행될 때에도 국회 특위 위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총회 개최 전부터 국회 특위와 정부 유치위원회 간 간담회 진행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당시 총회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PT 외에도 2027인정박람회 개최 희망국들의 리셉션도 열렸다. 세르비아 총리, 주불 세르비아 대사, 아르헨티나 관광스포츠부 장관, 주불 스페인 대사 등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을 소개하며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 세계박람회 유치 경력 있는 오사카 방문

2025년 세계박람회 개최지인 오사카의 유치 성공 전략을 배우기 위해 국회 특위에서 오사카 현지도 방문했다. 오사카는 2025년 외에도 1970년에도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경력이 있는 도시다. 1970년 세계박람회 관련 시설 시찰과 함께 미야베 관서경제동우회 상임감사, 포리 2025 일본국제박람회협회 이사, 히로세 시게오 관서동우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를 면담했다.

부산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최초의 등록세계박람회를 열게 된다. 5년을 주기로 열리는 등록세계박람회는 참가국이 자국관 건설 비용 등을 모두 직접 투자한다. 부산세계박람회는 창출되는 일자리만도 50만 개, 종합적인 경제효과는 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저성장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적 품질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K-pop으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회외교 차원에서 국회의원들도 동문서주하고 있다. 타 경쟁국에 비해 유치 경쟁에 늦었던 약점이 의회와 정부, 지자체, 재계를 더욱 끈끈하게 묶을 수 있는 강점으로 바뀌면서 전화위복이 되었다. 모두가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에서도 막판 대역전극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뒷심은 여전히 건재하다. 오는 11월 부산의 반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외교 동향

2030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결정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향후 10~20년 내 우리나라가 개최 가능한 최대 규모 행사이자 경제·문화·외교적으로 영향력이 큰 행사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유치에 힘써나가고 있다. 정부와 민간은 민·관 합동 추진체계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2022년 7월에 발족시키는 등 유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도 정부와 민간과 협력해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각국 의회 및 정부 인사와 접촉해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을 보완하는 동시에 선도적으로 각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2022년 2월에 첫 회의를 개최한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초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는 중이다. 또한, 2023년 1월에 구성된 김진표 국회의장 소속의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3월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외교 전략을 논의하는 등 국회도 역량을 결집해 힘을 보태고 있다.



황승기 국제국장  
국회사무처

### 주요 유치지원 활동 현황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시부터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의회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외교 확대를 약속했다. 국회의장은 폴란드·루마니아(2022년 8월), 포르투갈·스페인(2022년 9월), 르완다 IPU 총회(2022년 10월), 베트남·인도네시아(2023년 1월) 등을 방문



해 각 국가의 국회의장 및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개최 지지를 요청했다. 최근 3월에는 제8회 므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각국 의회 대표들에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조지아 국회의장,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 루마니아 하원의장, 노르웨이 국회의장 등을 국회에 초청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부산의 우수성 등을 소개하며 부산 유치 지지 확보에 힘썼다. 4월에는 아세안 주한외교사절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해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당부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023년 2월 몽골을 방문해 몽골 국회의장으로부터 부산에 대한 몽골의 공식 지지를 확인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022년 11월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국회의장과 면담에서 지지를 요청하는 등 국회부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장단이 합심해 유치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장단뿐만 아니라 의원친선협회와 상임위원회 등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각 의원친선협회는 올해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스페인, 케냐, 탄자니아 등을 방문해 각 회원국 의원 등을 대상으로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일례로, 작년 9월에는 튀르키예-한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이 국회 초청으로 방한해 부산세계박람회 설명회에 참석하고 박람회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 지난 1월에는 한-튀르키예 의원친선협회가 튀르키예를 답방해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의원친선협회를 만나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 국회, 초당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의안’ 의결

한편, 현지 실사를 위해 5박 6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은 4월 3일 국회를 방문했는데, 이날 국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해 여야를 떠난 초당적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현지실사를 앞두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실사단에 결의문을 직접 전달하고 국회의원 전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재호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위원장 등이 함께 실사단을 접견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 현지실사를 마친 뒤 BIE 실사단은 기자회견에서 “정말 따뜻하고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며 “부산시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를 했다. 전 국민의 뜨거운 열망과 국회·정부·민간이 하나가 되어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모습이 실사단뿐만 아니라 세계박람회 개최지에 투표하는 각 회원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회도 의장단·의원친선협회·부산세계박람회특위·개별 의원 등이 힘을 모아 전 국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 준비된 부산(BUSAN is Ready),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발자취와 현지실사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이하 BIE)<sup>1)</sup> 실사단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4월 2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번 실사단<sup>2)</sup>의 핵심 인사인 파트릭 슈페히트(Patrick Specht) 실사단장은 현지실사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박람회 개최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치 후보국의 필수 의무사항인 이번 현지실사는 우리나라가 작년 9월에 제출한 유치계획서를 실사하는 자리였다. 현지실사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6월 BIE 총회에서 171개 전 회원국에 회람되며 올해 11월 주최국을 결정하는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총 4개국이 2030 세계박람회의 자국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부산에 앞서 현지실사를 마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는 우리나라 부산의 가장 강력한 맞수로 꼽힌다. 박람회 유치 후보국으로 우리나라만이 지니는 차별성에 긍정적 평가를 받은 이번 현지실사를 되돌아보며 지금까지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의 발자취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도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하여 2021년 6월 BIE에 박람회 유치를 공식 신청했다. 이후 2021년 11월 1차 PT를 시작으로 작년 6월과 11월에 치른 경쟁 PT까지 총 3차례의 PT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9월에는 이번 현지실사의 기초자



이경호 지원단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1) BIE는 총회(최고의사결정기구), 4개 위원회(집행위·행정예산위 등),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2) 실사단은 독일 출신 BIE 행정예산위원장인 파트릭 슈페히트(Patrick Specht) 단장을 비롯해 디미트리 케르켄테츠(Dimitri S. Kerkentzes) BIE 사무총장, 케빈 아이작(Kevin Isaac) 세인트키츠 네비스 대표, 마누엘 살치리(Manuel Salchli) 스위스 대표, 페르디난드 나기(Ferdinand Nagy) 루마니아 대표, 그리고 3명의 BIE 사무국 직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료가 되는 유치계획서를 제출했다. 유치계획서는 박람회 개최 능력 및 개최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BIE 전 회원국에 공개됐다.

이와 같은 BIE 공식 대응 외에도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교섭 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유치사절단과 특사 파견을 비롯해 다자 회의체를 활용한 집중 교섭 등을 통해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 한 유치 활동과 더불어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중심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기업들의 해외 교섭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유치교섭 활동뿐 아니라 성공적 유치를 위해 손꼽히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국민의 관심과 지지다. 박람회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세계 무대에서 문화강국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배우 이정재, 가수 BTS, 소프라노 조수미 등을 위촉해 국내외 관심을 모았고, 특집방송과 기사 등으로 박람회의 의의와 효과를 전달하는 등 국민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국내외 전방위적 홍보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 준비된 부산, 박람회 개최를 위해 모든 것을 갖춘 도시

이번 현장실사는 4차례의 PT와 더불어 정부, 국회, 기업의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과 부산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체험행사로 준비했다. 4차례 이루어진 PT는 총론(Political Unity), 주제(Theme), 박람회장(Site), 홍보 및 재정(People & Money)로 나누어 구성했다. PT에는 정부 고위급 인사와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부산만의 차별점과 우위 요소를 실사단에 게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특히 세 번째 박람회장(Site)

관련 PT에서는 홀로그램과 도심항공교통(UAM) 시뮬레이터를 연계해 개최 장소인 북항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호평을 이끌었다. 정부와 국회, 기업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와의 면담에서 우리나라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BIE 실사단에 약속하며 박람회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개최역량과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국회 방문 일정에서 보여준 국회 지지 결의문은 우리나라의 유치 의지를 실사단에 강력히 전달하는 데 큰 인상을 남겼다. 실사단은 지지 결의문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 의결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의욕이 없어졌다”라는 평을 전했다.

이번 현지실사로 실사단은 우리나라가 작년 11월 제안한 인류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인 ‘부산 이니셔티브’에 대해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내비쳤다. 더불어 부산역 광장, 거리 환영, 김해공항 환송 등 약 만명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로 보여준 실사단을 향한 환대는 부산시민의 유치 의지와 열망을 전달하며 실사단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부산의 경쟁력인 접근성과 인프라뿐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문화강국의 모습을 선보이며 실사보고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중이다.

다가오는 6월에 BIE 총회를 마치면 오는 11월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이 투표로 결정된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아직 남은 발걸음이 많다. 국민의 지지와 관심으로 끝까지 성공적인 여정이 되길 바라며, 세계박람회 다섯 글자 앞에 ‘부산’이 당당히 호명될 날을 기대한다.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부산의 진심

“왜 부산에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3년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러면 역으로 묻는 것부터 시작한다. “외발자전거 탈래? 아니면 두발자전거 탈래?” 물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대답은 무조건 “두발자전거”다. 우연한 기회에 외발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다. 웬만한 실력자가 아니고서는 균형을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래 탈 수도, 속도를 낼 수도 없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의 한 바퀴로 돌아가는 국가다. 균형발전이라는 화두가 제시된 지 어언 30~40년은 족히 되었으나, 우리는 그 해묵은 숙제를 도저히 풀지 못하고 있다. 전체 국토의 12%도 되지 않는 좁은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으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설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수도권은 주택난, 교통체증 등 과도한 집중에 따른 문제를, 지방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멸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대전환을 이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G7 국가로 도약할 기회가 있다면 무엇일까? 당연하게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부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남부권에 두 번째 바퀴를 만드는 것이다.

부산은 입지적으로 서울보다 글로벌 잠재력이 뛰어나고,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7위의 컨테이너항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게 되었으니, 물류거점으로서 세계적인 허브가 될 수 있음



조유장 본부장  
부산시 2030 엑스포추진본부



은 자명하다. 수도권 일극주의로 고사 위기에 처한 남부권이 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도시 인프라를 정비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면, 국가 균형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대한민국도 한 바퀴에서 두 바퀴로 돌아가는 더 강한 성장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 100만인 서명운동, 시민결의대회 개최 등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진짜 유치할 수 있나?”

다음으로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최근에 하는 말이 있다. “Busan is Ready” 현실사에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다.

부산은 이미 시민들의 폭발적인 열기와 환희 속에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는 11월 유치 결정 때까지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많은 관심을 얻었지만, 사실 부산시로서는 3천일이 넘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간절히 바라온 일이다. 부산시가 먼저 2014년에 국가 사업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후 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바탕으로 2019년 마침내 국가 사업화를 이루어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139만 명의 서명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시민결의대회, 시민대토론회, 시민보고대회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부산의 주인으로서 유치 의지를 결집해 결정적인 힘을 보탰다.

지금은 정부, 부산시, 국회, 상공계 등 범국가적인 유치체제가 구축됐지만 부산시는 자체적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먼저 갖췄다. 부산시는 2014년 8월 1개 팀으

로 시작된 전담조직을 현재 13개 팀의 2030 엑스포추진 본부로 확대했고, 부산시의회는 2022년 7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과 법적 지원, 대외 외교활동 추진 등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산시 유치 활동의 백미는 사단법인 2030 부산월드 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에 있다. 2015년 7월부터 지역 상공계, 학계, 여성계, 종교계, 노동계 등을 아울러 범시민 역량결집과 유치 분위기 확산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침을 겪고 있던 2020년부터 지금까지 범시민유치위원회를 통해 모인 기부금만 50억 원이 넘는다. 북항재개발 사업을 통해 친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는 개항부지는 2026년까지 기존 시설 이전, 2027년까지 부지조성,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전시관 건축 등의 순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난 4월 7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최대 변수였던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가 통합된 힘을 보였고, 그 덕분에 8명의 실사단에게 ‘Korea one team’의 열정과 저력을 확실히 선보일 수 있었다.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 만장일치 결의문 채택, 부산역 환영행사에 모여주신 5천500명의 시민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벅차오르는 순간들이다.

이제는 이렇게 하나된 힘을 11월까지 이어나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대한민국이 가진 신바람의 에너지를 믿는다. 오는 연말 뜨거운 감격을 대한민국 모두와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의미와 경제 효과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될 경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제 3대 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등록박람회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된다.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규모에 맞는 국격 제고의 기회도 맞이할 수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견인했다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는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여는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박람회가 지켜온 핵심 가치인 진보와 평화, 교육과 교류는 현대문명을 구성하는 수많은 발명품으로 탄생해 세계박람회를 통해 세상에 소개됐다. 나아가 현재의 세계박람회는 전 세계 인류·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의 장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에 부산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신청했다. 부산 세계박람회는 환경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과 문화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미래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세계 도시 건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다양한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박람회 개최는 국가 이미지 및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 위상 제고는 물론 다양한 국제교류와 국제교역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박람회 기간 중 여러 나라의 정상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져 글로벌 외교의 장이 펼쳐진다. 또한 박람회 개최를 전후해 전 세계 미디어에 노출됨으로써 개최 국가 및 지역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알려지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박람회장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 교통망 확충, 주택 개량 등은 지역적으로도 도시재생의 시작점으로서 중요



김이태 교수  
부산대 관광컨벤션학과



한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그리고 개최 준비과정에서 사회 가치와 행동 양식을 국제기준으로 상향시키는 시민의식 운동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체감 조성 및 자긍심 고취, 지역주민들과 국민 사이의 자부심과 단결감과 같은 '심리적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돼 개최도시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부산세계박람회의 경제효과 61조 원 예상

박람회가 유치된다면 2030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부산 북항 일원에서 등록엑스포가 개최된다. 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성 비용으로 약 5조 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며, 개최기간 동안 40여 글로벌 기업과 160개 국가 이상, 내·외국인을 합쳐 약 3천500만 명 이상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비해 월등히 큰 경제적 파급효과이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관람객은 300만 명, 경제파급효과는 11조 5천억 원이었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관람객은 138만 명, 경제파급효과는 20조 5천억 원이었다. 부산세계박람회는 개최 기간이 긴 만큼 기대되는 경제효과가 약 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앞서 열린 행사들과 비교해도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대전과 여수 박람회는 개최 국가가 직접 건설해 유·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었으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주제와 규모의 제한이 전혀 없고, 개최국이 아닌 참가국이 비용을 들여 전시관을 건설하기 때문에 인정엑스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역경제 붐업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막을 내린 두바이의 경우 192개국이 직접 자비로

국가관을 건립해 최고의 호평을 받았는데 첨단으로 무장한 각 국가관 건립비용으로 많게는 수백억에서 수십억까지 들어 건설하고 철거했다. 2022년 3월 두바이 비즈니스 그룹 및 협회 조사에 따르면 두바이 지역 기업 73.5%는 박람회 기간 동안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 및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76.5%는 사업 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UAE)는 비석유 무역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5천1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또한 박람회 폐막 이후 많은 유·무형의 유산이 남게 되는데, 잘 지어진 유형의 유산은 박람회 폐막 이후 부산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은 연 700만 명의 관광객(누적 3억 명 돌파, 해외 75%)이 방문해 매출액 1천300억 원, 경제적 가치 617조 원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제 관련 산업기술 육성, 교육 등 지역발전 기반을 다지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 활성화로 관련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구조고도화가 기대된다. 특히 부·울·경 산업특화 및 각 지역 간 경제 연계구조가 긴밀해져 국가 신성장축인 남부 경제권 형성이 촉진되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 과밀화를 막아 국가균형발전 균형추 역할수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한다고 해서 부산만의 행사로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 박람회는 대한민국의 터닝포인트가 될 세계인의 축제다. 따라서 전 국민의 지지와 협조, 그리고 정부와 부산시 및 각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박람회 유치를 위해 바쁘게 노력하는 모든 분께 갈채와 성원을 보내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한다. 🍀

## “백년지대계 교육, 미래사회 대비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할 것”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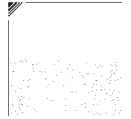
### Q. 교육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위원장님으로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교육위원회는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백년지대계를 논의하는 곳으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 위원님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어느 위원회보다 열정은 큰 상임위원입니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전반기 여당 교육위원장을 맡았었고, 동일인이 교육위원장으로 재선출된 경우가 1950년대 이후 70년 만에 제가 처음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교육정책 한길만 판 저를 인정해 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인데 여당 위원장이나 야당 위원장이나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구해야 할 가치를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지혜롭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Q. 제21대국회에서 교육위가 거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교육은 백년지대계지만 그동안의 교육정책은 정권교체, 현안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학생과 학부모, 국민이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인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제가 대표발의했고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인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이고 자주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교육위원회는 노력했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과가 있었다면, 후반기에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방대학 살리기에 앞장섰습니다. 지방소멸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의식 확산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OECD 평균 1.1%의 절반에 불과하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65.1%에 불과합니다. 설상가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학의 재정은 더 악화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의 어려움은 곧바로 학생들의 교육, 복지 여건 악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방대학은 더 심각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고등교육 위기극복 주제 공청회를 여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유초중등 교육 재원이었던 교육세를 나누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의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당장에 닥친 대학의 위기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교육위원회는 계속해서 고등교육 위기극복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정책에 관해 노력하겠습니다.

#### Q. 올해 교육위의 주요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A. 지난 2월 24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학폭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긴급현안 질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 분리, 가해자 소송에 대한 피해자 법률지원, 대입 전형에 학교 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 12일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했지만 교육적 해결이 아

닌 엄벌주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장의 우려가 큼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학교폭력 징계 기록 보존 기간 연장인데, 오히려 이로 인한 불복 소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벌 강화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본질은 교육적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는 서로 치유하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 Q. 위원장님의 정치철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교육위 여야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A. 그동안 우리 사회는 80년 서울의 봄,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 혁명까지를 포함해서 운동을 통한 변화를 모색해왔습니다. 저는 정치도 이의 연장 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은 예전엔 민중이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국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존재로 민심의 바다 위에서 헤쳐 나아가면서 변화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제 정치철학입니다.

특히, 저는 교육 외길만 걸어오는 동안 우리 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목표에 맞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치인 유기홍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우리 교육이 대전환 시대를 맞았을 때 국가교육위원회도 설립했지'나 '대학이 어려울 때 돌파구도 만들었지' 같은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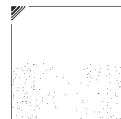
글 박민선 사진 김지범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부산 북구강서구**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부산 북구는 조선시대부터 물류의 중심지였다. 구한말에는 선각자들이 인재 육성을 위해 곳곳에 학교를 세웠고,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광복 이후에는 상공업이 번창했다. 현재 동남경제권 핵심 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북구에서 전재수 의원을 만났다. 이곳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를 위한 공사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 만덕-센텀 도시고속화 도로, 만덕3터널 건설로 지역 숙원 해결

전재수 의원은 국회보 취재진을 가장 먼저 도로공사 현장으로 안내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 도로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중앙로를 거쳐 해운대 재송동 센텀시티 수영강변대로를 연결하는 공사로 왕복 4차선에 9.62km 규모의 도로를 지하터널로 연결하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제 공약중 하나로, 고속도로가 바로 지역과 연결돼 교통체증이 심각한 북구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 40분 걸리던 상습 정체 구간이 10분대로 줄어들고, 지상부의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부산과 동부산이 더 가까워지면서 지역 균형 개발은 물론 지역 경제효과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 건설로 인한 생산·임금·고용유발 효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만 2조 1천290억 원으로 북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생활권 활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말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발파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

동 등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전 의원은 사고 현장의 보강 대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민협의체 운영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 도로 건설 현장에 이어 전 의원은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간 도로 개설(만덕3터널) 현장을 찾았다. 덕천동과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연결하는 것으로, 1995년부터 민자 사업과 재정사업을 오가면서 사업계획이 수차례 바뀌는 등 난항을 겪은 서부산권의 숙원 사업이다.

전 의원은 “북구 만덕터널 앞 교차로는 부산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라며 “만덕1, 2 터널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북구와 연제구가 연결돼 지역균형 개발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부산의 새 야경 명소, ‘금빛노을브릿지’

장소를 옮겨 전 의원은 부산에서 가장 긴 보행다리인 ‘금빛노을브릿지’로 이동했다. 금빛노을브릿지는 구포시장 입구부터 화명생태





전재수 의원(오른쪽)이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원까지 연결하는 길이 382m, 폭 3m의 다리로, 지난해 5월 11일 준공됐으며 평일 약 2천 명, 주말 약 3천 명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전 의원은 “부산 북구에서 바라보는 낙동강의 석양은 황금빛으로 서쪽 하늘과 강물을 동시에 물들여 장관이다”라며 “이곳은 서부산권의 랜드마크로 주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또 도심과 낙동강, 시장을 방문한 사람과 생태공원을 이어주는 다리로, 시장에서 먹거리를 구입해 금빛노을브릿지를 건너 화명생태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전 의원은 화명생태공원 문화 사업과 연계한 야간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 개발하고, 물과 빛을 연계한 낙동강 별빛 테마공원도 계획 중이라며 앞으로 동서균형발전 및 서부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더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빛노을브릿지 인근에서는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공사도 한창이다. 강변대로(다대~양산 간)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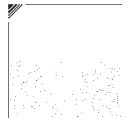
단절돼 있는 부산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을 다리로 연결하는 것으로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다.

전 의원은 “이곳이 완공되면 낙동강 구포나루 10리길이 완성되고 ‘걷기 좋은 북구’의 시너지도 극대화된다”며 “금빛노을브릿지와 함께 광안대교를 넘어서는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치할 것

마지막으로 전재수 의원은 전국 3대 개시장이었던 옛 구포개시장 자리를 찾았다.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살아 있는 개와 닭, 오리 등을 도축, 판매하던 60년된 개시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구포시장 고객전용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전 의원은 “가축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설득과 논의가 이어졌다. 도축뿐만 아



옛 구포개시장을 철거한 후 새로 세워진 구포시장 공영주차장을 찾은 전재수 의원



구포시장 입구

나라 유통·판매도 하지 않는 ‘완전폐업’은 전국에서 구포 개시장 사례가 최초다. 2019 한국갤럽 조사 결과 부산시민 10명 중 7명이 구포개시장 폐업에 대해 잘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개시장 폐업 후 도살될 뻔하다 구조된 어미개가 11마리의 강아지를 낳은 일이 있었습니다. 개시장 폐업을 위해 힘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북구에서) 4번의 도전 끝에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부산 북구에서 민주당계 의원이 배출된 건 3당 합당 이후 최초였다. 전 의원은 지역 밀착 행보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재선에도 성공했고 여러 방송에 패널로 출연해 전국적인 인지도도 쌓았다. 그는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로 맡고 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도 간사로 활동했다.

최근 전 의원은 국회 원 구성 시기마다 반복되는 여야 갈등과 국회 개점휴업 상태를 막기 위해 일명 ‘국회 정시 출발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장단 선출이 법정기한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 절차와 기간을 설정했고,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시스템 분배’ 제도를 도입해 여야 갈등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 의원은 “어느덧 사회적 약자가 돼버린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는 약자가 기댈 수 있는,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좀 더 꼼꼼하게 이웃의 불편을 들여다보고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글 고영선 사진 김지범

## 꾸준함의 힘, 반복의 힘, 축적의 힘



###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경상남도 밀양시의령군  
함안군창녕군)

3선의 조해진 의원은 백봉신사상을 세 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국회의 대표적인 ‘젠틀맨’ 의원으로 꼽힌다. 그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꾸준함의 힘, 반복의 힘, 축적의 힘’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켜왔다는 조해진 의원을 국회보가 만났다.

조해진 의원은 “지금 당장은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이라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다보면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꾸준히 반복하고 축적하며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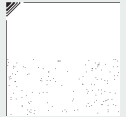
그가 20대 때부터 계속 해온 것 중의 하나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다고 사람이 바뀌거나 눈에 띄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10년 혹은 20년이 지났을 때, 또 평생을 계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그 전과는 다른 나,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무렵부터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성경읽기·기도와 함께 그가 매일 하는 또 하나의 일은 일기 쓰기다.

“일기를 쓰며 매일을 점검하며 10년을 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확실하게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꼭 일기를 쓰고 잠자리에 듭니다.”

조 의원은 본인의 일기 외에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



와 아내, 세 자녀의 일기까지 하루에 6번의 일기를 쓴다고 했다. 어머니와 전화를 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그 내용을 일기에 담는다는 것이다.

“큰딸이 지금 스물아홉 살인데 두 살 때부터 육아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둘째딸과 셋째딸은 임신 진단을 받은 날부터 일기를 시작해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머니가 자꾸 늘어가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기록을 남기고 싶어 어머니에 대한 일기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경과 기도, 일기 쓰기가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몸의 건강을 위해 그는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보좌관 생활을 15년 정도 한 후 의원이 되었는데 늘 시간에 쫓겨 살다 보니 운동할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매일 팔굽혀펴기를 10개에서 20개 정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것도 매일 하다 보니 건강에 꽤 도움이 됩니다. 석 달 정도 꾸준히 하면 근육에 힘이 붙고 그렇게 5년, 10년 계속하면 따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반복의 힘, 축적의 힘인 거지요.”

조해진 의원은 꾸준함과 반복, 축적의 힘을 통해 스스로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어릴 때는 내성적이고 소심했고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해온 습관을 통해 성품이나 기질이 많이 바뀌었고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내면이 안정되니 사물이나 세계를 보는 사고방식도 훨씬 밝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조금씩 바뀌고 다듬어지면서 단단해진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정치의 변화와 개혁으로 국민들에게 희망 드리고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해진 의원은 박찬중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 후 한나라당 이회창 총

재 보좌역과 이명박 서울시장 비서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부대변인을 거쳐 제18대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했다.

조해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는 많은 의정활동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꼽았다.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울산에서부터 밀양-창녕-의령-함천-거창-함양을 잇는 즉, 부울경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사금액이 6조 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입니다. 사업 발표 후 2년 동안 진척이 없어 고민하던 저는 당시 울산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정갑윤 의원님과 의논해 우선 5억 원을 예산에 포함시켜서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매년 2천억 원, 3천억 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나갔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밀양 구간은 부분 개통이 됐고 나머지는 내년쯤 거의 완공됩니다.”

조 의원은 “6조 원에 이르는 큰 공사지만 시작은 5억 원이었다”며 “아주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고, 또 시작을 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속 사업의 추진 경과를 챙겨야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도 그때 배웠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다가올 22대 총선에서 4선 의원이 되어 원내대표나 당대표에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총선 때 제가 내세웠던 공약들을 점검해 보니 70% 정도 완료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30%도 잘 마무리해서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할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문제도 잘 마무리해서 정치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결실을 보고 싶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이 이원욱 의원을 칭찬합니다



**“치열한 논쟁 뒤에도  
야당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는 분”**

이원욱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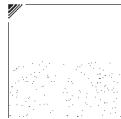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5월호 칭찬합니다의 주인공은 이원욱 의원이다.

지난 달 그를 추천한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지난 제20대국회에서 국토위 여야간사로 함께했는데, 간사는 정당 간 입장차가 큰 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양쪽 입장을 잘 조율해야 하는 자리다.

상임위장 안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예산,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회의장을 벗어나면 야당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셔서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박덕흠 의원님은 진영논리에 물들지 않고 여야를 떠나 선후배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화답했다. “여야 간사가 궁합이 잘 맞아야 위원회가 별 탈 없이 잘 돌아가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덕분에 당시 산적한 국토위 현안들을 격한 논쟁 없이 잘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가 인생의 소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4월 13일 선거제 개선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마지막 날, 이원욱 의원이 토론 단상에 올라서며 한 말이었다. 제20대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건 지정)’으로 강행한 것에 대한 사과였다. 또 여당이 주장하는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발언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강행은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고, 의원정수 축소문제는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 법관을 꿈꿨던 이원욱 의원은 1982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한 후 사법고시를 준비했지만, 어느 날 학생회관 계단에서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규명과 군부독재타도를 부르짖는 학생들의 시위 현장을 처음 보면서 운동권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는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군부정권 치하에 열지 못하고 있던 형사모의재판을 부활시켰고, 법과대학 신문 ‘정의의 광장’을 창간하며 민주화운동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1985년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돼 2년여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1997년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만은 민주주의의 상징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생업을 뒤로하고 대선캠프에 몸을 담았다. 선거 이후 정당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새정치국민회의 당직자 공채로 정치에 입문해 10년 넘게 중앙당에서 일하면서 정당정치를 몸소 경험했다. 이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낸 후 2008년 선거에서 민주당원이 단 3명이었던 화성읍에 출마해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3선을 했다.

“부모님의 눈물을 보면서도 출세를 포기하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남들이 마다하는 열세인 지역에 도전해 지역구민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가 제 소신인데, 정치인이기 전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그동안 발의한 법안 중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특별한 순간으로 꼽았다. 그는 “중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제21대국회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실태조사의 근거를 담은 일명 ‘좋은어른법 1호(아동복지법)’와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좋은어른법 2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를 개정할 일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호시설 아이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어른법’을 계속 발굴해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다음 칭찬주자로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천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추천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심이 깊죠. 정치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경청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김태호 의원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미소와 함께 편안한 얼굴로 얘기를 들어주는데 얼마나 믿음이 가겠습니까? 또 외통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정책과 현안을 해결할 때 무엇보다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임진완

## 국민의 안전, 생명과 존엄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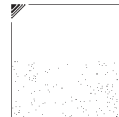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 대표적인 청년 의원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침묵 운동을 벌였던 용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두고 십여 년 전의 세월호 참사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출신의 유일한 국회 의원으로 일당백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용혜인 의원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인생을 뒤흔든 두 가지 사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낸 용혜인 의원은 어린 시절에 대해 조용하고 논술 공부를 위해 보수일간지를 읽던 모범생이었다고 회상했다. 경희대 사회과학부에서 정치외교를 전공한 그는 대학 시절의 두 가지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대학교 3학년이던 2011년의 한진중공업 사태였습니다. 당시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진숙



씨를 만났는데,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시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는 2014년의 세월호 참사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평범한 삶을 꿈꾸던 그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추모 행진을 벌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600만 명의 서명을 모았지만,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정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16년 스물일곱의 나이에 노동당 비례대표 1번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마했다. 이후 그는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초대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제21대 총선에서 다양한 정당들과의 선거연합이 모색됐고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5번에 배치된 그는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2020년 5월 13일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국회에 들어온 용혜인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청년들이 더욱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또 2021년 8월 본회의장에서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에 찬성하며 한 발언은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본격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소수정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교섭단체 위주로 국회가 운영되는 점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목표이자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2022년 10월 말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용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를 많이 떠올리게 했다. 예전에는 내가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

에 있고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참사에서 교훈을 얻고 안전사회를 만들었어야 할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참사 예방조차 하지 못했던 현 정부는 사회적 참사가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사회를 향한 과제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절실히 바랐던 안전사회 개혁이 남김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횡재세’ 도입해야

용혜인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4월 우리나라 최초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며 우리도 이제 횡재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업이 운 좋게 초과 이익을 얻은 부분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용 의원은 “횡재세 권고안에 따라 4대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했다면, 지난해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거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유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 혜택을 누렸고, 금융기관은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큰 소득을 얻었지만, 서민들은 유가 급등으로 ‘난방비 폭탄’과 금리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역대급 부자감세 세법을 통과시키고 난 후 경제 상황마저 악화돼 유류세 인상을 검토할 정도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횡재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의원으로서 그동안 유의미한 대안과 정책을 내놓았다고 자부합니다.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소수정당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가닿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뛰겠습니다.” 🏠

글 고영선 사진 김진원

## 농식품바우처 활성화, 교원양성 수급, 지방대 경쟁력 강화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소병훈·김승남·서삼석·신정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안병길 의원(국민의힘),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3월 21일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본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용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과 이지용 강원대 교수가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 필요성, 운영 이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용지 연구원은 수혜자가 현금지원을 식품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현재 운영되는 먹거리 지원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용 강원대 교수는 지원품목 한정에 따른 농식품바우처 이용률 저하와 특정품목 수요 집중에 따른 문제, 사용처 제한에 따른 식품 접근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효과성 제고, 품목확대를 통한 정책 만족도 증대, 식생활 교육 연계를 통한 실질적 효과 달성 등을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소비자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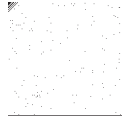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원 품목 확대와 사용률 증대 방안 등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외에도 정책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1차 가공제품 확대, 가정간편식이나 밀키트 포함 등 대상품목의 확대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농업·농촌 가치 공감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23일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창원 경인교육대 총장은 ‘교육대전환을 이끄는 교원양성과 수급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고, 이광현 부산교육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을 설명하며 교원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은 김연수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장창기 공주대 전 사범대학장, 김신혜 계명대 교육대학원장, 손병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이 참여해 교육대-사범대 통합,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해외 교원양성 사례,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기초 교원 정원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소규모학교 교육 지원 등을 논의했다.



### ·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3월 29일 의원회관에서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해수면 변동 연구의 현황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오현주 국립해양조사원 실장은 전국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변동 결과를 통해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한인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관은 1968년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표층 수온을 관측한 이후 모든 해역에서 수온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반면, 수심 100m에서는 오히려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고했다. 강현우 본부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원 차원에서 운영 중인 ‘해양기후예측센터’의 다양한 기후 예측 활동과 함께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수면 변동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줬다.

참석자 대부분은 해양국가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연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바다에 필요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해수면 상승 전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해양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 ·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3월 29일 국회박물관 2층 강당에서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낡은 교육규제를 점검하고 지방대의 자립 성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내용을 점검하고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 산학연 협력 등이 논의됐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재정긴박을 통한 경영위기 대학 지정과 법인 해산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폐교 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보호조치도 담고 있다.

이어 서영호 강원대 교수와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지자체, 지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이정미 교수는 대학교육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사업, 이른바 라이즈 사업에서 아직 미흡한 지자체-대학-산업간 협력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백영철 연세대 법인사무처장은 사립대학의 비영리기관으로서의 경직적 한계를 지적하며, 규제 완화와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김교홍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은 4월 4일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현수막 난립이 심각해져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현수막 내용이 원래의 입법 취지인 정당의 이상과 정책을 알리기보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용도로 변질하면서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최호택 배재대 교수를 좌장으로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 김정현 대한민국 시·군·구 협의회 전문위원,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 문철수 한신대 교수 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구본근 지역기반정책관은 “통상적 정당 활동과 환경·안전·도시미관·형평성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령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현수막 게재 수량과 기간 등이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돼야 하고, 내용으로는 상대 정당의 비판보다는 자당의 정책 소개나 홍보 중심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교홍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여야는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3월 각각 현수막 표시 방법·기간, 장소·개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통해 정당 현수막 관리법 개정을 좀 더 보완하고 정당 현수막의 운영을 비롯해 올바른 정당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국회토론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4월 7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 7월에 구축되는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농정시스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 농정시스템은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차세대 농정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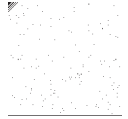
이날 토론회는 신용태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 김기주 농정원 디지털혁신본부 본부장, 유찬희 농촌경제연구원 실장, 안기홍 LG CNS 공공DX사업팀 책임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농정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농업인의 편의성 향상, 농업 공무원의 업무생산성 향상 등 경제성 분석, 정보화 부문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을 종합평가했다.

#### ·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

이용빈·우원식·김경만·김병옥·김성주·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국회1.5°C포럼, 자전거타는 국회모임은 4월 11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사회의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확대 및 교통 인프라와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탄소중립 수송부문 정책방향을 전기차 중심에서 벗어나 자전거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다.

윤제용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선희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 이구창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정책이사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전기



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은 비효율적이고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과장됐으며 자전거를 실질적인 차로 인정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위해 자전거 활성화 등 대중교통 확대 시 지방교부세 반영, 자전거 관련 특별교부세 또는 공모사업 확대, 자전거 이용을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 체계 전환, 자전거 부담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투자 확대 등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폐지, 자전거 주차장 기능과 질을 고려한 제도 개선, 자전거우선도로 설치 기준 완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 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 것인가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은 4월 1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산불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기후위기사대, 산불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제로 산불환경 분석, 산불 재난관리 단계별 예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산림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보호법 법제화, 관리정책 전환, 진압 전술의 변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실효성 있는 산불감시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차상화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은 “산불 예찰과 효율적인 감시 인력 및 헬기 운용 등 산불 초기 진화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 · 공공행정 AI 도입방안 모색 포럼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는 공공행정 AI 도입방안 모색 포럼이 4월 17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챗GPT의 등장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을 공공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과 민간기업·정부·국회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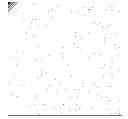
장철민 의원은 “AI의 공공행정 도입은 업무의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행정의 역사 자체를 바꿀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하는 협력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의 발제는 하정우 네이버 AI Lab 소장이 맡았다. 하 소장은 “초거대 AI가 공공업무에 활용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공공행정 AI 도입 과정, 공공데이터 보호 방안, 초거대 AI 적용 가능 사례 등을 설명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공공 행정지원, 대민서비스 처리에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도 “정부의 데이터를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입법부와 함께 고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상무는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안내 (156건, 3.21~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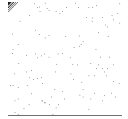
| 일시      | 세미나                                                             | 주최                                                           | 장소             |
|---------|-----------------------------------------------------------------|--------------------------------------------------------------|----------------|
| 3.21(화) | 스타트업과 원원은 불가능한가                                                 | 강훈식, 김한규, 박상혁, 이소영, 이용빈, 전재수, 김성원, 이웅, 김병욱(국), 정희용, 황보승희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재건사업 국회 토론회                                          | 김미애 의원실                                                      | 의원회관 대회의실      |
|         |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소병훈, 김승남, 박덕흠, 서삼석, 신정훈, 안병길,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미향 의원실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         |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                                            | 조경태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가 야기할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홍익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 지방공향 글로벌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 민홍철,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                                  | 어기구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회 포럼                                  | 이상헌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미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심사 기준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위기와 도전                    | 김홍길, 조정식, 김한정, 박정, 김경만, 박영순 의원실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         | 소상공인·자영업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한 방안                                       | 민병덕, 이동주 의원실                                                 |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 3.22(수) |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 황희, 권철승, 김병기, 김성원, 맹성규, 신영대, 이현승, 전재수, 정태호, 조승래, 한준호 의원실     | 의원회관 대회의실      |
|         | 국회부의장 김영주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4강 국제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대한민국 | 김영주 의원실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         | 금융 노동자 간담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김한규 의원실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         |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                                    | 조승래, 변재일, 이인영, 이원욱, 윤영찬, 이정문, 장경태 의원실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어 어떻게 해야 하나?                               | 박완주, 정필모, 고민정, 장경태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 방안 토론회                           | 한무경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홍석준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 우크라이나전쟁 1년, 그리고 한국사회                                            | 인재근, 고영인, 양경숙 의원실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         |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 오영환 의원실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         | 녹색채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전해철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3.23(목) | 제3회 생명존중의날 선포대회 및 기념세미나                                         | 강기윤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서영석, 이종성 의원실                                                 | 국회도서관 강당       |
|         |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 서동용 의원실                                                      |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         | 해양안보 역량 강화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포럼                                 | 최재형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일시      | 세미나                                                           | 주최                                              | 장소                       |
|---------|---------------------------------------------------------------|-------------------------------------------------|--------------------------|
| 3.23(목) |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                                                | 김용판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 검사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진선미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3.24(금)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                                      | 오기형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                                 | 최승재 의원실                                         | 의원회관 대회의실                |
|         |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개혁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포럼                            | 박대출 의원실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         | 법 왜곡죄 입법 촉구-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 강민정, 김남국, 김두관 의원실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 감사원 통제 감사의 문제점 진단                                             | 한병도, 윤건영, 정태호, 진선미, 홍기원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3.27(월) | 경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                                        | 김영선, 강기운, 윤한홍, 이달근, 최형두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내구제대출 폰테크 휴대폰깡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김영주, 유기홍, 조승래, 윤영덕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 주거-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 송기현 의원실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 2023년 지역 디지털산업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                      | 홍석준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 기업 ESG를 위한 공급망 실사법 제정 토론회                                     | 정태호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 송언석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                                | 이인선, 이용빈 의원실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         |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서정숙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 간접고용노동 중간취직 제도 개선 토론회                                         | 김영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          |
| 3.28(화) | 도시침수 방지대책 정책 포럼                                               | 변재일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 이용선, 김성환, 이소영, 양이원영 의원실, 에너지전환포럼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 의원입법 규제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윤재옥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편의점 강력범죄 예방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                            | 민병덕, 이동주, 이성만, 김경만, 강선우 의원실                     |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         |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신현영, 김민석, 남인순, 진선미, 이해식 의원실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         |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 강민정, 강득구,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의원실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 이장섭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 국회부의장 김영주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5강 금융 혼돈의 금융시장 이슈 및 전망 | 김영주 의원실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         | 금융 노동자 간담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김한규 의원실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         |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이소영 의원실, 국회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3.29(수) |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변재일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                                         | 이태규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회박물관 강당 2층              |
|         | 한전인재개발원 부지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                              | 고용진 의원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12층 큐브홀 |
|         |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안병길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 모빌리티법 입법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 박상혁, 박정하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전의 역할 국회토론회                                    | 박영순, 윤창현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 서영교, 송석준, 민병덕 의원실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 3.30(목) | 노후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민홍철, 김두관, 이소영, 장철민, 조오섭, 최인호, 홍기원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토론회                                         | 강병원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 대한민국 트램 도입 활성화 국회 토론회                                         | 박재호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 일시      | 세미나                                       | 주최                                                   | 장소                 |
|---------|-------------------------------------------|------------------------------------------------------|--------------------|
| 3.30(목) |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 윤두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 자동차 정비 제도 개선 세미나                          | 김두관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국민연금 개혁의 과제와 쟁점                           | 최재형 의원실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 3.31(금) | 가축 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홍문표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          | 이용선, 한정애, 진성준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 상호의존의 무기화와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의 득실 세미나     | 김홍걸 의원실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 4.3(수)  | 의료기기 혁신 성장 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 서영석, 백종현 의원실                                         | 의원회의위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 세포배양식품의 문제와 해법                            | 전혜숙, 최영희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 스마트돌봄 혁신 포럼                               | 김성원, 최영희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4.4(화)  |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전환               | 이병훈, 도종환, 이개호, 이용호 의원실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         |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 방안                           | 양기대, 최형두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이만희, 김교홍 의원실                                         |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         |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 우원식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 취약계층을 위한 은퇴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                   | 최재형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 김윤덕, 박상혁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 미래 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           | 김수홍 의원실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         |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선 토론회                    | 김영진 의원실                                              |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         | 불법 다단계 금융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 김희곤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 에너지안보와 순환경제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방안             | 임이자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4.5(수)  |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 입법공청회               | 이달곤, 윤재갑 의원실                                         | 국회도서관 강당           |
|         |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방향과 과제                  | 박덕흠, 박수영 의원실                                         |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  |
|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 신영대 의원실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4.6(목)  |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 김민철, 김수홍, 김한규, 김희재, 도종환, 서동용, 위성곤, 이소영, 최인호, 최중윤 의원실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         |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                              | 정우택, 성일종, 하영제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 김성주, 이용우, 정태호, 강은미 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306호        |
|         | 국토·공간정보의 다양한 활용과 보안 강화를 위한 토론회            | 민홍철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4.7(금)  |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국회토론회                    | 최춘식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 토권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 류성걸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박정, 박영순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 고령사회,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 | 박완주, 이명수, 성일종, 강훈식, 문진석, 이정문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황운하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4.10(월) |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이용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홍영표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 서영교, 신동근, 김주영, 양기대, 이수진, 홍성국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일시      | 세미나                                                              | 주최                                                                  | 장소             |
|---------|------------------------------------------------------------------|---------------------------------------------------------------------|----------------|
| 4.10(월) | 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토론회                                  | 이달곤, 권성동, 서상석, 어기규, 윤한홍, 김원이, 배준영, 서범수, 서일준, 윤재갑, 정일영, 최형두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 최혜영, 우원식, 남인순, 서영교, 이학영, 박주민, 진성준, 강민정, 김경만, 서영석, 이수진(비), 이정문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 조명희, 황운하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 강은미, 고영인, 김영진, 김한규, 남인순, 신현영, 용혜인, 윤후덕, 인재근, 정춘숙, 조은희, 최승재, 한준호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4.11(화)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용혜인, 강민정, 이탄희 의원실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 광명-목동선 추진 국회의원·정부기관 간담회                                          | 이용선, 양기대, 황희 의원실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         |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해법은?                                        | 우원식, 박용진, 이해식, 이은주 의원실                                              |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         |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                                              | 이용빈, 우원식, 김경만, 김병욱(민), 김성주, 신정훈, 최형두 의원실, 국회1.5°C포럼, 자전거타는 국회모임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 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영인 의원실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         | EU 범무청장 초청 강연 -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유럽에서의 추진과정, 그리고 한국의 과제 | 김성주 의원실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         | 에너지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한무경, 김한정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산업 대응방안                                  | 이인선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방안 정책토론회                                           | 이양수, 권성동, 박정하, 송기현, 유상범, 이철규 의원실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         |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 박홍근, 심상정, 한정애, 유의동 의원실                                              |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         | 리츠(REITs)산업 발전과 법인세 감면 방안 모색 간담회                                 | 김병욱(민), 조오섭 의원실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 4.12(수) |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이용우, 오기형, 류호정 의원실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         | '개인의 비극' 너머 대안을 묻다                                               | 고영인, 인재근, 최종윤, 권인숙, 양이원영, 우원식, 이개호, 이장섭, 정춘숙, 조오섭, 최연숙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 유럽고속철도로 본 ETX 북·중 국경 통과 방안                                       | 노웅래, 양기대 의원실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         |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평가와 개선 방안 모색                                      | 소병훈, 김승남, 위성곤, 신정훈 의원실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 김학욱, 김용판, 김경만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협동조합의 질적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기재부의 역할                                     | 서영교, 이동주, 진선미, 용혜인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 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 것인가?                                            | 홍문표 의원실                                                             | 의원회관 대회의실      |
|         | 산업은행 부산이전 관련기관 간담회                                               | 전봉민 의원실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긴급진단 토론회                                         | 이만희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발전방향                                            | 서정숙 의원실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4.13(목) | 다양한 가족, 정말 괜찮을까?                                                 | 정경희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 미래모빌리티 선도를 위한 대구 UAM 시범서비스 및 산업육성 전략포럼                           | 강대식, 이인선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 교통요금통 통합 공공교통 공공성                                                | 심상정, 이은주 의원실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         |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과학적 검증 방안은 무엇인가?                                    | 안병길 의원실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 윤석열 정부 교육자유특구 추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서동용 의원실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 일시      | 세미나                                          | 주최                                                             | 장소             |
|---------|----------------------------------------------|----------------------------------------------------------------|----------------|
| 4.13(목) |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김예지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박용진, 서영교, 심상정, 우원식, 이용우, 이은주, 이학영, 전용기, 조오섭, 진성준, 홍기원 의원실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 4.14(금) |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강민정, 김경만, 김두관,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양경숙, 우원식, 이동주, 이용빈, 조오섭, 최안호 의원실 | 의원회관 대회의실      |
|         |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 박주민 의원실                                                        |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         |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 황보승희 의원실                                                       | 부산 영도구청 대강당    |
|         | 보육 현장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재배치 방안 모색              | 정춘숙 의원실                                                        | 의원회관 대회의실      |
|         | 산불진압 헬기의 야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조응천 의원실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 이종성 의원실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         | 공공행정 AI 도입방안 모색 포럼                           | 장철민 의원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한국 개발협력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과 향후 방향    | 유익동 의원실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         | 대한민국의 자체 핵보유, 국가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 류성걸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이종성, 김예지, 최혜영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영배 의원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활용 토론회                           | 김형동, 전해철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4.17(월) | 2030 전공의 간담회: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 인재근, 정춘숙, 신현영 의원실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         |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 권철승 의원실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         | 도서관 자료 구입비 증액을 위한 국회토론회                      | 홍익표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 북한의 군사전략과 핵·미사일 능력 분석과 평가                    | 이인영 의원실, 국회 한반도경제전략 연구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방안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 김희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분과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 탄소중립, 왜 블루카본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 윤미향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         | 항공산업 ESG 국회 토론회                              | 한준호, 박상혁, 정일영, 진성준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 무인기 전력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토론회                       | 안규백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 김종민, 윤두현 의원실                                                   | 국회도서관 강당       |
|         | 국민연금 2040 넷제로 Net Zero 달성 방안 토론회             | 한정애 의원실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 김웅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         |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선교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4.18(화) |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윤호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 국민의힘 정책위, 박성중, 김승수, 최승재 의원실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 4.19(수) |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                     | 소병훈, 이종배 의원실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         | 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모색                     | 김민석 의원실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 GMO 주키니 호박 유통 및 정부 부실대처에 의한 소비자·농민 피해 대책 간담회 | 윤미향, 강은미 의원실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토론회                          | 김남국 의원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정책자료'(<https://ampos.nanet.go.kr:7443/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첩홍도

벚꽃은 졌지만 새빨간 꽃들이 국회 방문객을 반겨줍니다. 4월에서 5월에  
있보다 먼저 꽃이 피어나는 ‘만첩홍도’입니다. 꽃복숭아라고도 불리는 이 나  
무는 짙은 붉은색 꽃잎이 겹겹이 쌓여 만장이나 될지도 모른다고 하여 만첩  
이라 이름지어졌다고 합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 항만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토론회

신항(新港)과 그 주변지역의 주민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이달곤·권성동·서삼석·여기구·윤한홍·김원이·배준영·서범수·서일준·윤재갑·정일영·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제21대국회에 등원하면서 신항만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과 설계의 프로세스를 깊이 들여다보니 미비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진해 신항은 총 사업비 13조 원이 투입되는, 단위사업으로는 단군 역사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부산항 신항만 예정지역 지원계획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단발성 지원과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생활 터전 상실과 생존권 소멸, 토지이용 제한, 환경오염 등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주변지역과 지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교하고 세밀한 항만행정 시스템 확립과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지원과 보상은 물론, 항만·도시·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재원(기금) 조달계획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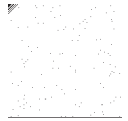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에 의한 산업 침체에도 올해 조선업이 세계 1위를

탈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라며 “항만의 국익적 역할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중요하고 항만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인천항은 개항 이래 수도권 최대의 국제무역항으로서 인천 지역경제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항만 주변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의 길이 열리고 전국 각지의 항만도시들이 더 큰 성장동력을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항만은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 지역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 주변지역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2040년까지 12조 원이 투입되는 진해 신항건설은 우리 거제의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등 다양한 교통망과 연계해 동남권 물류, 교통, 관광 등의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신항 건설 과정에서 터전을 잃게 될 지역민들과 소음 등에 시달리는 인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곤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토론회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항만 개발뿐만 아니라 배후지역에 대한 고려와 지원 노력 반영해야

발제를 맡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기본방향과 쟁점사항, 법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장은 “항만개발 운영 과정의 환경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평가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항만이 심각한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의 일반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항만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지원 인프라 등을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형하 부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 실장은 “항만개발 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은 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보상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특별법 제정 시에는 지원범위와 기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익과 영향력을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수현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항만으로 인한 배후지역과 주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나 시설 설치 등의 일회적 또는 단편적 사업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항만 개발과 운영에만 초점을 맞춘 항만정책이 아니라 항만 배후지역에 대한 고려와 지원 노력이 반영된 항만과 도시의 상생방안 모색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우석 법무법인 CLASS 변호사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법안의 지원 사업 대상 구역범위의 정교화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용준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의 최소화, 일자리 창출 실질화,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대응,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법규정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달곤 의원은 “이번 행사는 이미 지난해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구축된 특별법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진해 신항 주변지역의 주민 보상과 지원, 항만과 도시,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재원 조달 계획까지 망라한 법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글 김현아

##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정법률의 배경 및 심사 과정

종전의 직불제는 쌀 과잉생산·농가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직불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에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기능을 강화하며,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로 2019년 12월 31일에 전부개정되고 이듬해 5월 1일에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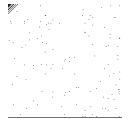
그러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전부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에, 2017~2019년 농지 요건은 실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농업계를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제기되었다.

2021년 3월 19일 법안소위에서 동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2017~2019년 농지 요건 삭제에 대해 직불금 부정 수급 증대 우려 및 예산 제약을 근거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 동 법률안은 계류되었다.

제20대 대선 후보들은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선택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공동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공익직불제 개정에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2차례의 법안소위 및 공청회, 의원실·정부의 간담



권영진 수석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한 결과 여야정이 공감대를 형성해 실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2022년 9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개정법률의 주요 사항을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해 살펴본다.

기본직불제의 경우, 실경작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직불금의 2017~2019년 농지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전부개정 당시 기본직불금 수령 요건에 2017~2019년 농지 요건을 신설한 것은 기본직불금 부정 수급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부정 수급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정 수급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기존 직불제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된 농업인들을 구제할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했으나,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과거 직불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이 어렵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에 대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마련했다.

선택직불제의 경우 농촌 소멸, 식량안보 위기,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식량안

보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청년농업인직불제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추후 법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쌀 과잉공급을 완화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전략작물직불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기본직불제 위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데, 주요 농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직불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선택직불제 사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통해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경작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개정안은 2020년 법률 전부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부, 농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을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해진다.

그러나 국가 및 농업계의 현안인 농촌 소멸, 식량안보 위기,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택직불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은 직불금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선택직불제 지원 대상에 청년농 육성,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 법률의 지속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2023년 양회 참관기



채미강  
국회 중국 주재관

2023년 3월 4일 오후 3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제 14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가 개막하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两会, Two Sessions)의 시작을 알렸다. 양회란 매년 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중국의 의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이하 ‘정협’, 중국의 정책자문기구)<sup>1)</sup>, 이들 두 기구의 전체회의를 가리킨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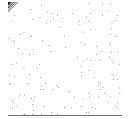
양회에서는 한 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을 포함한 주요 정책 방향이 발표되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올해 양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고 제14기 전국인대와 정협이 자오저지 상무위원장, 왕후닝 주석 등 새로운 지도부와 5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자리로서, 위드 코로나의 중국이 치르는 첫 대규모 정치행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달랐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주재관으로 부임한 지 1주년을 맞이하는 날 직접 양회를 참관하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기에, 이를 기록으로 남겨 보고자 한다.

### 통상 3월 초, 정협이 전국인대보다 1~2일 먼저 개막

1989년 제정된 전국인대 의사규칙은 매년 1분기마다 전체회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는데, 주로 3월에 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1분기 국가지출 규모가 연간 국가지출 규모의 약 1/3을 차지하는 만큼 전국인대의 정부예산보고 비준 작업이 너무 늦어지

1) 중국 공산당이 정책 결정 시 의견을 수렴하는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 입법권 등 직접적인 정책 결정 권한은 없으나, 매년 양회 때 정협 위원들의 제안 등을 통해 전국인대의 활동을 보조한다.

2) 전국인대 대표(제14기 기준 총 2천977명)와 정협 위원(제14기 전국위원회 기준 총 2천172명)은 기본적으로 본업이 따로 있는 겸직 대표이므로 이들 5천 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1년 중 양회 기간이 유일하다. 사실상 상시적인 입법 기능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175명)가 수행한다.



면 안 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일찍 회의를 열게 되면 전년도 결산 등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1월과 2월은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음력 설)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3월 초 양회 개막이 전통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sup>3)</sup>

정협 개막일이 전국인대 개막일보다 하루이틀 정도 앞서는 관행은 ‘선 협상·토론, 후 정책결정’이라는 논리에서 비롯되었다. 정협은 장정(章程)에 언급된 3대 기능—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 및 의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인대보다 먼저 개최하고, 정협 위원은 뒤이어 열리는 전국인대 전체회의에 열석해 정부업무보고 등<sup>4)</sup>에 대한 심의·토론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표> 최근 6년간 양회 개최기간

| 연도   | 회의 명칭                       | 개최기간                   |
|------|-----------------------------|------------------------|
| 2018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 | 2018. 3. 3.~15. (13일간) |
|      |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 2018. 3. 5.~20. (16일간) |
| 2019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2차회의 | 2019. 3. 3.~13. (11일간) |
|      |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         | 2019. 3. 5.~15. (11일간) |
| 2020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3차회의 | 2020. 5. 21.~27. (7일간) |
|      |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 2020. 5. 22.~28. (7일간) |
| 2021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4차회의 | 2021. 3. 4.~10. (7일간)  |
|      |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         | 2021. 3. 5.~11. (7일간)  |
| 2022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5차회의 | 2022. 3. 4.~10. (7일간)  |
|      |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         | 2022. 3. 5.~11. (7일간)  |
| 2023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 | 2023. 3. 4.~11. (8일간)  |
|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 2023. 3. 5.~13. (9일간)  |



외교단별로 배부된 양회 개막식 참관 허가증(좌)  
인민대회당 동편 출입문 앞에 마련된 휴대폰 보관함(우)

### 올해 중국 경제성장을 목표치 5% 발표

회의 참관이 허용된 인원은 참관일 전날 저녁 PCR 검사를 받고 지정 숙소에서 격리한 후, 다음 날 단체버스를 타고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했다. 작년 12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 기조를 변경했기에 양회 때도 방역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내심 기대했는데,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를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휴대폰과 가방 등도 인민대회당 내부 반입이 금지됐다.

매년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행사는 단연 전국인대 개막일의 정부업무보고, 그 중에서도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을 목표치 발표다. 리커창 전임 총리의 마지막 보고였던 올해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목표치가 5% 내외로 전년도 목표치(5.5%)보다 0.5%p 낮게 설정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안정적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2023년의 8대 중점 과제로서 ①내수 확대 ②현

3)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양회가 5월로 연기되거나 기간 또한 일주일로 단축되는 등 변수가 존재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21년 전국인대 의사규칙(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会议规则)을 개정해 전체회의를 매년 1분기에 개최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4) 정부업무보고, 계획보고, 예산보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소위 양고(两高)라 불리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 그리고 전국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일컬어 ‘양회 7대 보고’라 한다.



전임자인 제13기 전국인대 리잔수 상무위원장(좌)과 악수하는 제14기 전국인대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우) (출처: 중국 신화사)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기념우표(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기념우표(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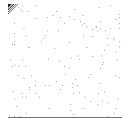
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 ③국유·민간경제의 경쟁력 강화 ④외자 유치 확대 ⑤경제·금융 리스크 방지 ⑥식량 생산 안정 및 농촌 진흥 ⑦환경 친화적 발전 ⑧민생 보장 및 사회 서비스 발전이 제시되었다.

전국인대의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3월 7일에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와 우리의 정부조직 개편에 해당하는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보고가 이루어졌다. 전임 국회의장 격인 제13기 전국인대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지난 5년간의 전국인대 업무실적 등을 발표하고, 향후 업무 건의를 통해 합헌성 심사 및 과학기술·민생·사회·문화·환경·안전·국방 분야의 입법 강화, 감독업무의 실효성 강화, 대표의 직무수행능력 제고, 다양한 형식을 활용한 외국 의회와의 교류 강화 등을 당부했다.

### 기념우표에 담긴 양회 참관의 추억

중국 국가우정국은 이번 양회를 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인민대회당의 모습이 담긴 기념우표 880만 장을 발행했다. 봉투까지 한 세트로, 제14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 개막일(2023. 3. 5.) 도장까지 찍혀 있어 첫회의 참관을 기념하기에 손색이 없다.

최근 한국에서도 달 궤도선 다누리의 기념우표가 발행된 사례를 보면, 스마트폰 시대에도 여전히 가볍고 실용적인 기념품으로서 우표의 역할이 남아있는 것 같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제헌절이라든지, 국회 개원일 등 우리 국회의 주요 행사 계기에도 기념우표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



## 이달의 청원

국회는 국회청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지난 4월 17일 동의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청원인이 제작한 청원 홍보동영상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해 청원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했다.

제21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청원은 총 123건으로 의원소개청원이 65건이고, 국민동의청원이 58건이었다. 이 중 지난 한 달 동안(3월 21일~4월 18일) 접수된 청원은 모두 3건(의원소개청원 1건, 국민동의청원 2건)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동의청원인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예방 및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그 사후처리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3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다음으로, 의원소개청원인 '오렌지카운티 영사관 출

장소 개설에 관한 청원'은 50여만 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하고 많은 한인 정치인들을 배출한 오렌지카운티가 중요한 지역임에도 매주 1회 순회 영사업무에 의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LA 총영사관 출장소를 오렌지 카운티에 개설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6일 임종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같은 날 외교통일위원회로 회부됐다.

마지막으로, 국민동의청원인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은 오랜 기간 학교폭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2차 가해의 두려움으로 즉각적인 신고가 힘든 것이 현실이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공소시효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폐지, 피해사실에 기반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 폐지, 무죄추정의 원칙 완화, 촉법 폐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19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접수된 청원의 원문 및 위원회 심사정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청원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정리 국회민원지원센터

| 청원제목                         | 청원자(소개의원)   | 소관위   | 접수일   | 구분     |
|------------------------------|-------------|-------|-------|--------|
|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이재근         | 행정안전위 | 4.3.  | 국민동의청원 |
| 오렌지카운티 영사관 출장소 개설에 관한 청원     | 권석대(임종성 의원) | 외교통일위 | 4.6.  | 의원소개청원 |
|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          | 표예림         | 법제사법위 | 4.19. | 국민동의청원 |

##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 등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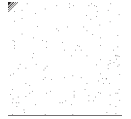
첨단전략산업특위,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지방R&D  
투자 촉진 등 논의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는 4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첨단산업특위는 국내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촉진, 인재양성, 규제개혁, 금융지원 등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로, 활동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인재 양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둘러싼 국내기업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여야는 첨단산업 육성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식 위원(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만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김수홍 위원(더불어민주당)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의 현안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며 “연구개발 투자가 지역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와 교육부는 지방 인재 양성을 위해 비수도권 우선 정책에 중점을 두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정부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안철수 위원(국민의힘)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우리가 5년 안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5년간 우리가 집중해 초격차 과학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것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처럼 중장기적으로 다뤄야 하는 분야가 있는 만큼 (단기·중장기 기술을) 나눠서 접근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대 국가전략기술 내 기술 간 격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단기·중장기 목표 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우리 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신영대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원욱 위원에서 홍기원 위원으로 교체됐다.

#### 연금개혁특위,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4월 12일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먼저 김수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이 발제를 한 후 류재린·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수환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 갭 완화를 위해 하위 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의 목표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의 소득, 자산 수준 향상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대체해야 한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류재린 부연구위원은 “목표수급률 70%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재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행 70%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등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보다는 기준중위소득 같은 공통된 상대적 기준에 의거해 정하는 것이 수급대상 범위 조정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시점에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단은 기초연금밖에 없다. 그러면 기초연금은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게 적정한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국민연금하고 어떤 종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

다. 배준영 위원(국민의힘)은 “국민연금(개편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초연금을 논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멀리뛰기를 하는데 구름판이 정해지지 않고 막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피해 사건 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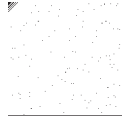
4월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 전체 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의 원인이 쟁점이 됐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한다”며 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민철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에 일벌백계와 수사만 강조했는데, 피해 지원책에만 집중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겠느냐”고 따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김선교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그는 전세 사기 원인에 대해서도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 구제’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심상정 위원(정의당)은 자신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명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언급하며 “과거 2008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부실한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민사 법률 관계상 공공 매입의 매수 대금은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가게 돼 있다.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매입)하느냐. 그 가격은 누가 정하느냐”고 반박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의 조속한 상정을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주문했다. 현재 국토위에는 심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차인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외에도 조오섭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서둘러달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 외교통일위, 미 정보기관 대통령 도·감청 의혹 등 논의

4월 12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우리의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초기 접근 태도는 굴욕적이고 무마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확인 없이는 예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외교채널을 통해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고 확인된 사실이 어떤 건지 공유를 해 달라고 (미국 측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야당 위원들의 잇단 지적에 박 장관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김홍걸 위원(무소속)이 “어느 나라든 도청을 시도한다는 것은 국익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도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른바 ‘유출 문건’에 발언록이 등장하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에게 진위를 확인했느냐는 이상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는 “대통령실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것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외교부에서 불법 도청, 감청을 막기 위해 업무공간에 구체적인 보안대책을 취하고 있느냐”는 태영호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는 “보안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 NEWS

## 김진표 국회의장, 제주 4·3평화공원 참배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1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4·3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들을 만나 위로했다.

김진표 의장은 제주 4·3평화공원 내 위령제단을 참배하고, 위패 봉안실 방명록에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아픔을 넘어 화해·상생·미래로 나아가시는 평화의 섬, 제주도민을 응원합니다”라고 남겼다.

참배를 마친 김 의장은 4·3희생자 유족회를 만나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참혹한 역사의 기록”이라며 “4·3 75주년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4·3은 제주도민·정부·국회가 함께 노력해 화해·상생·미래로 나아가는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범”이라며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나라당의 발의로 시작한 ‘4·3 특별법’ 제정부터 2021~2022년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을 개정해 실행하는 국가보상 및 수형인 재심 등 20여 년간의 노력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주도민께서 스스로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상생·미래로 가는 출발을 보여주셨다”며 “하귀리 주민들이 마을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주체적으로 ‘영모완’을 건립한 것처럼 제주도민의 노력 덕에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전 세계를 향해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4·3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역사의 큰 흐름 아래 화해·상생·미래로 나아가감으로써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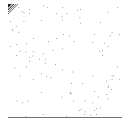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 방한 의원단 초청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5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을 단장으로 하는 방한 의원단을 초청해 ‘한미의원연맹’ 및 ‘미한의원연맹’ 창설 등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발전방안, 대북 확장억제 강화책, 한미 간 산업·기술 협력 등 한·미 의회가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한단은 매콜 위원장과 한국계 영 김 인도·태평양 소위원장(공화당), 코리아 코커스 및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민주당)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우리 국가가 지난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 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 의회 또한 이에 화답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의 단결된 모습을 미국 입법부 차원에서도 곧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지역 및 범세계적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의회외교의 틀이 필요하다”며 “일본·중국 등과 달리 한미 의회 간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갖춘 공식 대화 채널(의원연맹)이 부재한 상황인데, 혈맹 관계인 한미동맹의 역사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 의회 내 ‘미한의원연맹’ 창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현안의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한미의원연맹’을 올해 안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양국 의원연맹 창설을 위해 상반기 내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미한의원연맹 창설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국회의 봄, 희망을 피우다’ 4년 만의 국회개방행사 개최



국회사무처는 4월 8일과 9일 이틀간 ‘국회의 봄, 희망을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회개방행사’를 개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개방행사를 코로나19 유행과 복합 경제위기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와 국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이

벤트로 기획했다.

국회개방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020년부터 중단해 4년 만에 재개됐다. 국회잔디광장 등 국회 경내에서는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참여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4월 8일 행사의 첫 순서로 국회를 찾은 국민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국회의장 김진표의 희망 토크’이 진행됐다. 공식석상에서 보지 못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진들이 선보였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를 찾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답변했다.

이어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그룹 ‘라포엠’의 콘서트와 ‘월드비전 합창단’, 국회연구단체[대중문화예술(K-POP)연구회] 등이 준비한 무대가 야간까지 계속됐다.

다음날인 4월 9일 오전 메인무대에서는 ‘한국문화재단 예술단’의 전통공연을 시작으로 브레이킹 시범단 ‘대한브레이킹경기연맹(KBF)’의 공연과 가아금소녀 서아림의 공연이, 5시 30분부터 시작된 오후 메인무대에서는 e스포츠 친선경기가 진행됐다.

또, 개방행사 참여 사진을 일정한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됐다.

### 국회부산도서관, 개관1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31일 국회부산도서관 1층에서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형오·정의화 전(前) 국회의장, 김도읍·박수영·박재호·백종환·최인호·황보승희 의원 등 국회 및 부산광역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1주년을 축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제 도서관은 책의 보고(寶庫)라는 개념을 넘어, 시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된 지 오래”이며 “국회부산도서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민의 중심에서 언제나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국회부산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협력기관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신라대학교와 (재)영화의전당에 공로패를 수여하고, 도서관 우수 이용자에게는 이용 우수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현대어린이책미술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글을 담은 그림’ 전시를 개막해 세계적인 유명 작가들과 신진 작가들의 작품 원화, 아트 프린트, 그림책 등 70여 점을 소개했다. 한국인 최초로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파도야 놀자 Wave’를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디지털 패드를 활용해 그림책을 완성해보는 체험 코너도 마련했다.

또 국회부산도서관은 개관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세상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주제로 김형오 전(前) 국회의장의 특강을 개최하고, 을숙도문화회관과 함께 ‘2023 국회부산도서관 봄음악회’ 행사를 선보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기념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1천 명 이상의 정보이용자가 찾아오는 등 국회부산도서관은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큰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부산도서관은 ‘일상에서 함께하는 의회도서관의 의미’를 되새기며, 언제나 변함없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식정보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에산정책처,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발간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 주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연구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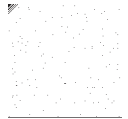
이번에 발간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에서는 후술할 세 권의 보고서 내용을 종합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효과성, 제도간 형평성 등 전반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아우르는 세 가지 주요 이슈별로 쟁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주요 개혁 시나리오에 따른 제도별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했다.

제2권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구성한 연구진들이 주축이 되어 독일·캐나다·일본·스웨덴·영국 등 5개 국가의 연금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제3권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개혁의 주요 쟁점 및 논의되는 개혁방안을 정리하고, 향후 70년(2023~2093년)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주요 개혁방안을 시나리오로 구성해 각각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했다.

제4권에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세 가지 직역연금제도별 개혁의 주요 쟁점과 개혁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70년(2023~2093년)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요 모수를 일치시키는 가정을 시나리오로 구성해 재정전망한 결과를 제시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4월 1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김한정 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 수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한전 및 가스공사의 적자 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에너지 위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여서 에너지 공급망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와 공동 주최한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의 환영사 등이 이어졌다.

유승훈 서울 과기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난방비 문제 해결,

요금 및 전력·가스산업 구조 개편, 국가감축 목표(NDC) 이행 방안과 탈원전 등 논쟁 해소와 경쟁력 있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재고 등 7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으며, 조홍중 단국대 교수 등 5명의 토론자는 세부 실천 과제와 문제점 등을 토론했다.

##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후위기’ 토론 개최



국회는 4월 11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를 주제로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는 기후위기에 더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은 축하 인사에서 “기후위기특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대책과 국민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외에 기후위기특위에서 서삼석 위원장, 안병길 위원, 이인선 위원이 참석했으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박병석 위원, 송석준 위원, 김희재 위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속기관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등이 참석했다. 🍵

## ‘수출효자’ 김산업을 육성하는 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12.23.]

김은 한국인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반찬이다. 최근 이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김 수출액은 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6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김 수출 규모는 지난해까지 10배 넘게 성장했다. 김은 우리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이다. 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회는 2020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을 의결했다.

### ‘식품업계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규민 조서관은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약 70%를 점유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 산업으로, 소위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김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미흡해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을 활성화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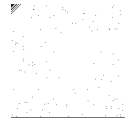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산업법에는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급안정·시설개선 등 경영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김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가 담겼다. 해양수산부는 김산업법 제정 이후 “생산단계부터 소비·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김산업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김산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도 법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김산업법은 김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김산업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정 이후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을 최종 선정했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곳당 50억 원, 총 150억 원(국비 75억 원, 지방비 7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종사자들에게 행정·예산 지원을 한다.

김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주요 지원 사업에는 △생산



전남 신안군 해상에 설치된 김양식장

성 향상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 개발 및 보급, 어장환경 개선 △위생·안전을 위해 유해요소 관리, 질병 관리 △품질 향상을 위한 수산물이력제, 품질 인증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 등이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김산업진흥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김산업 연구·개발 위한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법은 또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정 이후 해양수산부는 2022년 말 ‘목포수산물지원센터’를 제1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김산업 전문기관은 김 제품의 품질향상, 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 공정별 식품 안전성 연구 등 김 산업 성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그간 수출국 수요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김수출업체는 전문기관을 통해 제품개발에 필요한 가공공정 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 김영민 사무관은 “최근 김제품의 원료에 해당되는 물김 생산이 어촌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감소추세에 있다. 또 수출시 위생기준 강화, 인증제도 요구 등으로 국가 간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은 산업규모나 수출 면에서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산업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김산업법이 시행됐지만 김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 산업 전반의 연구 및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글 박민선



## 국회, 본회의 열어 법률안 62건 의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3월 30일 본회의(제404회(임시회) 제2차)를 열어 법률안 58건을 포함한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4월 13일 본회의(제405회(임시회) 제4차)를 열고 법률안 4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임대인의 미납 국세·체납액·지방세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체납여부를 알기 쉽도록 했다.

또 개정법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 292조 제3항을 준용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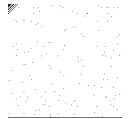
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불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했다.

개정법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인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과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고를 해야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판촉영업 법인의 대표나 이사 및 이에 종사하는 자 등이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 기술 분야로 정하고,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



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했다.

또,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현행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4%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첨단모빌리티(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이동성(Mobility, 모빌리티)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통적인 규제 및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서비스에 접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등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적용되는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써 조속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해 적용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장실습생에 대해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법은 추가로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제36조(금품청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규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역채널에서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송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로봇 산업 성장에 대비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보행자에 포함해 보도통

행 및 법정 의무 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로봇을 운용·조작·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운용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개정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대 사건 보도의 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이러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종전부지 소재의 광역지자체장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로 하되 광역지자체장이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의제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제정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외에도 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에 체육시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다른 법률이 규정한 인·허가를 의제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자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공항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국회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토론의 진수!

정책이슈와 의정현안에 대한  
쟁점을 파고드는 뜨거운 **정책토론!**



진행  
정관용 교수  
(사사평론가)

**정관용**

매주 목요일 밤 10시 / 생방송

**정책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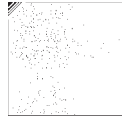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합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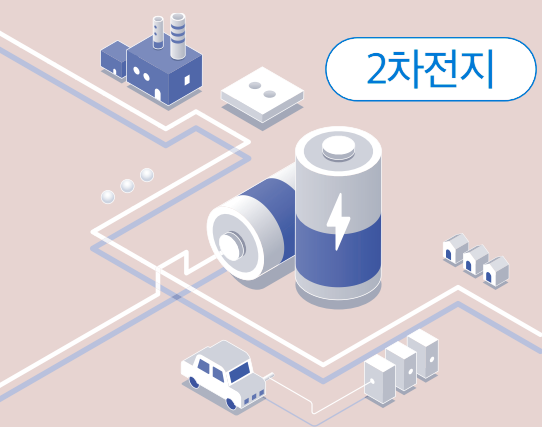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1-31 의결  
본회의 2023-02-27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 2차전지, 에너지 혁명을 이끈다



산업혁명의 궤적 저변에 깔려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꼭지는 단연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산업혁명 시기에는 증기기관차를 구동하기 위해서 석탄을 에너지로 사용했다. 이후에 석유가 운송과 난방 등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상당부분의 석탄을 대체하게 됐다. 화석연료는 매우 유한하고, 일부 보유국에 의존해야 하므로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등장했다. 어떠한 에너지이건 장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점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그 자리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데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다. 그 일환으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유럽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2030년 즈음 영국,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이 내연차 신규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니 자동차 회사에게 있어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전기차는 매연도 소리도 없으므로 친환경적이다. 또한 전기차는 기존의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에 비해서 엔진부터 동력전달까지 복잡한 기계 공학적인 부속품들이 없다. 기름을 넣거나 엔진오일과 엔진벨트 등을 교환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신 주기적으로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해줘야 한다.

배터리는 상당히 친숙한 이동식 전기 저장장치다. 가정용품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건전지는 충전이 된 채로 구매해서 한번 사용하고 나면 폐기되는 제품으로 1차전지라고 한다. 자동차 등의 이동수단에 쓰이는 배터리는 2차전지로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전지다. 3차전지도 있다. 3차전지는 연료를 주입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소 배터리라고 보면 된다. 도로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미국의 테슬라가 생산한 전기차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전기차의 아랫부분은 2차전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닛을 열면 엔진이 없기 때문에 트렁크처럼 적재공간이 있는데 프렁크라고 부른다. 당연히 자동차의 뒤쪽에 있던 배기구도 없다. 금융서비스 기업인 S&P 글로벌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루카스 베드나



르스키는 저서 ‘배터리전쟁(2023)’에서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원유의 79%가 교통 수단에 이용되며, 이미 현재까지의 배터리 기술 수준으로도 원유의 50%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것은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전기 자동차는 단순히 자동차가 전기로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존의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수출하던 중동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원 지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2차전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광물이 리튬이다. 리튬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기존의 산유국과는 상당히 다르다. 중국,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이 리튬 자원의 보유국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칠레는 리튬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불린다. 최고의 리튬 보유국이다. 중동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채굴부터 2차전지를 만드는 데까지의 고도의 기술적 공정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따라서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닿아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3개국에 전 세계 2차전지를 공급하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 특히 중국은 전기 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달리고 있으며, 이미 전기로 구동되는 선박도 운행 중이다. 중국의 전기차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경쟁 대상이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딜레마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새로이 열리는 에너지 자원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점이 중요하다. 연관되는 산업들이 줄줄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폐배터리를 운송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이나, 도시 광업으로 알려진 폐가전으로부터 금이나 리튬을 수거하는 사업 등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지만 정유 기술을 발전시켜 고품질의 석유제품 수출국이 됐다. 2차전지도 닮은꼴이다. 리튬 광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리튬을 가공해서 2차전지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인이다. 10년 후에 세계적으로 고품질의 2차전지와 3차전지의 전진 기지로 우뚝 설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분야의 미래는 밝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이러한 미래산업에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1등을 빨리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우 개념에서 창발적 선두주자로의 변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도 된다고 본다. 🍵

글 김동철 공학박사



“체계·자구 심사,  
탄핵 소추 등  
법사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쌓았죠”



장승훈 행정관  
법제사법위원회

**Q. 국회에서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일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중에 공직에서 근무하신 분이 많아 자연스럽게 진로를 공무원으로 결정하게 됐고, 실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국회는 공무원을 따로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학창시절에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기계적으로 암기했을 뿐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국회가 어떤 곳인지, 국회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민했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국가기관보다 꼭 국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2017년에 운 좋게 시험에 합격해 국회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Q.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헌법재판소 사무 및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여, 민법·상법·형법 등 국민의 권리·의무 및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을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소관 기관 대부분이 칼을 쥐고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특성상 첨예한 쟁점이 다수 논의되고, 국가 법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법률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무의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외에도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끝낸 모든 법안이 법사위로 전달돼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등을 살펴봅니다.

또한 탄핵소추 업무도 수행합니다. 실제로 탄핵소추 업무를 지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2021년 법관 탄핵소추 심판 종료 후 올해는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탄핵소추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으로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 선임 관련 실무 지원, 대리인과의 업무 협의, 소추위원의 변론기일 참석 지원, 탄핵심판 경과·결과 정리 등이 있습니다.

## Q. 법사위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법사위 행정관으로서 회의 준비, 회의 진행 지원 및 입법조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월 회의 일정·회의별 의사일정 정리 및 공지, 기관장 출석 등 소관 기관 업무 협의, 회의 관련 각 위원실 민원 대응, 회의 결과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사위 일부 고유법에 대해 검토보고서, 소위자료 작성 등 입법조사 업무도 수행합니다.

##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보람 된 일, 힘든 일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법안 심사 건입니다. 헌정사 최초로 검찰총장이 소위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후 철회됐는데, 결국 다시 안전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헌법 재판소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되는 등 정말 많은 사건이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법사위에서 일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보람은 넓은 세계에서 일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사위는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기관,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업무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제 근무 연차에 비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사위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특별히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위원회와 달리 법사위는

행정관 2명이 업무를 분담하므로 적어도 제 자리는 업무량이 많지 않고,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모두 합리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난도 높고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는 윗선에서도 맡아 처리하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친절히 알려주는 합리적인 부서 분위기 덕분에 많이 배우면서 즐겁게 일했습니다.

다만 법사위는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 민감한 주제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의 쟁점 법안까지 모두 논의할 수밖에 없는 소관 업무 특성상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갑자기 회의가 잡히거나 회의 도중 예상치 못한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업무 처리를 요한다는 점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자극제 역할을 한 동시에 다양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Q.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떤 업무를 맡든지 본연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바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년 근무를 마치고 정든 법사위를 떠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어느 부서를 가게 되든, 욕심부리지 않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가치를 계속 지키며 재미있게 근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이 인터뷰는 4월 24일 국회 정기 인사 시행 전 이루어졌습니다.

## 마스크 파노라마

흑사병에서 코로나19까지, 마스크의 과학과 정치

“‘마스크화된 삶’이 팬데믹을 의미했다면, ‘마스크 없는 삶’이 팬데믹의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징할 것이다.” -2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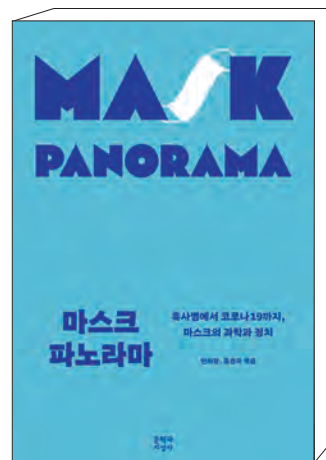
영원히 함께해야 할 것 같던 마스크도 이제 곧 벗어던질 수 있을 것 같다. 저자들의 말처럼 지난 3년간 마스크는 팬데믹과 동의어였고 마스크로부터의 해방은 곧 팬데믹의 종식을 상징한다.

코로나19는 일상에서의 불편함뿐 아니라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의 많은 측면에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이들은 비대면의 일상화와 구조화된 불평등, 저성장에 대한 불안감, 커지는 위험 등을 우려했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는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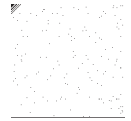
### 코로나19가 아닌 마스크를 주인공으로 돌아본 지난 3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나 위험에 대한 글들은 넘쳐 나지만, 이 책은 코로나19가 아닌 ‘마스크’를 주인공으로 지난 3년을 돌아본다. 멀게는 중세 유럽의 페스트 유행으로부터 20세기 초반 만주 페스트와 스페인 인플루엔자를 거쳐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마스크가 우리 삶에 등장하는 양상을 16명에 이르는 저자들만큼이나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본다.

이 책은 용어조차 어려운 의학 이야기나 당장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



윤희이 현재환, 홍성욱  
출판사 문학과 지성사  
출판일 2022. 9.



사회적 불평등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내 코 위에 걸쳐 있는 마스크 이야기이기에 친숙하면서도 흥미롭게 독자를 이끌어간다. 이웃이 만들어준 수제 마스크(1장), 기괴한 모습의 17세기 새부리 마스크(5장), 일제강점기 경성의 마스크당(黨)(9장)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마스크에 얹힌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의학적인 깊이 있는 분석들과 함께 어우러진다.

저자들의 전공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과 연관되어 있다. 과학기술학은 과학과 기술에 대해 역사, 철학, 사회학 등 수많은 학제의 시각으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저자들이 마스크의 역사와 이면을 살피면서 가장 주목한 대상도 마스크라는 사물의 물질성이면서 동시에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책을 ‘마스크의 사회물질적 역사(socio-material history)’(10쪽)로 명명한다. 사회물질성이란 사회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이 분리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마스크라는 단순하고 별다른 특징 없는 사물이 어떻게 우리 삶 전체에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표현한다.

독자들은 오염된 공기를 거르기 위해 고작해야 ‘필터’가 달린 한 뼀 크기의 천 조각을 귀에 걸기 쉽게 줄로 연결한 것이 전부인 마스크라는 물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얹혀 있음에 놀라게 될 것이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더 쉽게 이 물질을 받아들이는 현상에 대해 황사와 미세먼지의 경험(10장)과 식

민지 조선에서의 경험(9장)을 비교하는 것이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동아시아 마스크의 역사를 일본(6장)과 중국(7장), 그리고 우리나라(9장)의 시각에서 비교하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마스크의 정치학, 유럽과 동아시아 중심의 역사, 그리고 일제강점기로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마스크 등 큰 주제에 따라 3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두 연결되어 마스크가 우리 곁에 머무르게 된 과정을 서술한다.

지난 3년간 마치 우리 몸의 일부와도 같았던 마스크는 조만간 코로나19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운명이지만 마스크라는 물질은 새로운 바이러스와 함께 혹은 황사나 미세먼지와 함께 언제든 다시 일상화될 것이다.

이 책은 초기의 마스크 수급 혼란의 배경, 마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젠더 갈등, 국가마다 달랐던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의 역사, 그리고 사용한 마스크의 폐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코로나19의 공포에 놀려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여러 ‘마스크의 사회물질성’을 보여 주었다. 첫 장을 펼칠 때 이 책의 주인공은 ‘마스크’였지만 마지막 장을 닫을 때 주인공은 결국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었다. 저자들의 바람대로 많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마스크 공동체’로서의 우리와 마스크의 미래를 그려보고,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그리고 마스크와 함께 더 잘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글 박기범(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세계 3대 중국 여행기의 하나 ‘표해록(漂海錄)’



조선의 선비이자 관인(官人)이던 최부(崔溥: 1454~1504)는 제주도 추쇄경차관(제주도에 도피해 있는 죄인을 찾아내는 업무)으로 근무하던 중,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듣고 고향인 전라도 나주로 돌아오던 길에 풍랑을 만나 바다에 표류하다 중국에 도착한다.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귀국한 표류의 전말과 중국을 기행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표해록’이다. 1488년 1월에 제주 앞바다에서 표류하다 중국에 닿아 많은 고난을 겪은 뒤, 그해 6월에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록이어서 중국을 여행한 여행기의 하나인데, 15세기 작품이어서 중국 여행기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저서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와 함께 세계 3대 중국 여행기의 하나임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표해록’은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간행되어 중국인들이 많이 읽었으며,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중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다. 현재는 영어로도 번역되어 세계인이 읽는 세계적인 책이 되었다. 우리 조선의 책이

그렇게 널리 읽히고 있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니, 그 책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성종의 명에 따라 저술됐으나 공간(公刊)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저술한 지 80년이 지난 1569년에야 최부의 외손자 미암 유희춘에 의하여 간행됐고, 그 뒤 1578년에도 다시 간행됐다. 전라감사에 부제학을 지낸 미암 유희춘은 외조부의 저술이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힘을 기울여 간행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였으니, 외손자의 외할아버지를 숭모하던 정이 높았음도 알게 해 준다.

최부는 점필재 김종직의 문인으로 나주에서 태어났으나 해남의 정씨 집안으로 장가들어 주로 해남에서 활동하다 과거에 급제한 뒤에는 벼슬하며 서울에서 생활했다. 학문이 높고 문장에 뛰어나 서거정 등과 함께 ‘동국통감’ 편찬에 참여하고 이듬해에도 ‘동국여지승람’ 편찬에도 참여해 문장가로서의 명성이 매우 높았다. 그런 문장가로서 거센 풍랑에 표류하던 간난신고의 어려움을



유려한 필치로 표현했고, 중국 대륙에 도착해서는 해적으로 몰리고, 왜구로도 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박진감 넘치는 표현들이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제주에서 출발할 때 배에 탄 사람은 도합 43명이었다. 자신에게 딸린 몇 사람, 선장, 호송군 등 교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많아 죽느냐 사느냐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뱃사람들의 거친 행동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할 때가 있었으나, 학문이 높고 고매한 인격을 지닌 최부의 인품과 지도력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으니 최부의 선비정신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 책이 지닌 장점의 하나다. 죽음 앞에 거친 말씨와 행동은 뱃사람들이 쉽게 행하던 일인데, 이런 시련을 제대로 극복하고 43명 모두 무사히 귀국한 일 또한 쉽게 볼 일이 아니었다.

최부의 지도력을 보자. 해적의 창검에도 태연자약하였으며, 왜적으로 오인한 중국 관원의 심문에도 응답이 명쾌했다. 이런 데서 최부의 굳센 절의, 밝은 예절, 깊은 학문은 중국 사람들의 경탄과 동정과 공감을 불러일으켜 어떤 해로움도 당하지 않았다. 글을 읽다 보면 최부의 나라를 사랑하는 지극한 충의, 부모를 생각하는 애절한 효성이 중국 관원과 인민들과의 응답에서 언제나 솟구쳐 상대자의 심금을 울려 마지않았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명성 높은 인물들을 자랑했으며, 또 우리나라의 위신을 한껏 높여 주었다. 그런 결과로 중국 조정의 두터운 보살핌을 받았으며 황제까지 배알했고 여러 인사들과 간곡한 친선의 정을 나눌 수 있기도 했다.

이 책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 책에는 당시 중국의 문물제도, 생활풍습들도 많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문헌적 가치로도 귀중한 자료다. 이 기행문은 이와 같은 내용으

로 후대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당시의 대외관계를 아는데 일정하게 참고가 되며, 기행문학 발전을 연구하는 데에도 가치가 높은 유산이다. 책을 썼던 연대가 15세기,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하늘’이 하는 일이어서 무사할 수 있다는 운명론적 생각을 언급한 대목이 많아 당시 유자들의 사고가 보여져 아쉬운 대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한 바다, 미친 파도가 배를 삼켰다 뱉었다 하여 곤두박질로 전복, 침몰, 파선의 위기에 부딪히면서도 끝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43명 모두가 한몸 한뜻이 되어 그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인간 의지와 신념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을 대목이 많은 고전의 하나다.

더구나 이 ‘표해록’은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나왔으며 북한에서도 번역본이 나왔다. 북한에서는 ‘겨레고전 문학선집’의 하나로 번역하여 고전문학의 대표적인 저서로 선정되었던 점으로 보아도, 이 책은 15세기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사회 등의 대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여서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 기행문이다. 이런 고전이 조선의 선비이자 관인인 최부라는 문장가이자 학자의 손에서 저술되었던 것은, 당시 조선 학자들의 학문과 문장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런 학자이자 문장가는 당시의 당파싸움에 휘말려 무오사화에 함경도로 귀양갔다가 갑자사화에 처형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인데다, 김종직의 문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도한 반대파들이 최부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 51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학문과 사상을 제대로 완성해내지 못하고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래서 더욱 ‘표해록’은 우리를 슬프게도 해주지만 좌절과 포기를 거부한 용기를 배우게 해준다. 🍵

글 박석무(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국회 미술관은 국회에 전시된 미술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황영성, '가족이야기', 서양화, 162×130cm

**뜻 생명과 만물을 공경하는  
대인접물(待人接物)의 마음**



예술은 한 예술가의 체험으로부터 비롯한다. 모든 예술은 한 예술가가 체험한 것을 표현한 예술 작품을 통해 일어나는 소통 체계다. 그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주체 또한 하나의 개인으로서 자신의 감각기관을 이용해 작품이 발신하는 정보를 수신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작품에 대한 이해는 작품 자체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작품을 제작한 작가에 대한 선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 예술가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해왔으며, 어떤 생각으로 그 작품을 생산했는지를 아는 것이 작품 이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황영성의 삶과 예술을 관통하는 핵심은 가족에 대한 애뜻한 마음

여기 한 평생 가족 이야기를 펼쳐온 화가 황영성(1941~)이 있다. 그는 평생 가족 그림을 그렸다. 일제강점기에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고, 6·25전쟁 당시에 광주에 정착한 그는 지난 50여 년간 광주 화단을 이끌어온 원로 작가다. 그는 광주 근현대미술계의 선구자 오지호와 임직순의 계승자로 자리 잡았다. 해방 이후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미술학과를 만든 학교인 조선대를 졸업하고 교수로 자리 잡아 부총장까지 지낸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광주화단을 일궈냈다. 그는 광주에서 성장하고 활동하면서 향토적인 화풍을 배우며 그것을 심화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자신의 향토적이고 민족적인 색채를 보다 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넓혀가고 있다.

가족에 대한 애뜻한 마음. 그것은 황영성의 삶과 예술을 관통하는 핵심이다. 분단과 전쟁이라는 20세기 한 반도의 격동을 직접 겪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하여 가족을 잃고 생이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족

이야기란 그저 그런 뻔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분단을 경험하고 6·25전쟁을 경험하며 아픈 가족사를 경험한 황영성에게 가족은 그의 한평생을 지배하는 애뜻한 마음의 근원이다. 분단체제를 거치며 가족에 대한 동경을 품고 평생을 살아온 예술가인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도상들은 일상 속 가족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모습들이다.

황영성은 토속적인 정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형태를 단순화시켜 독자적인 화풍을 탄생시켰다. 그는 커다란 화면을 80개의 격자로 나눈 후, 그 안에 다양한 형상을 그려넣었다. 동물과 식물, 사물 등 다양한 이미지를 배치한 이 그림의 제목은 ‘가족이야기’다. 동물과 식물과 사물을 그려 놓고 가족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다. 그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주를 알려주는 단서다. 그는 평생 가족 그림을 그려왔다. 한 화면 안에 수십 개의 격자무늬를 그려넣고 그 안에 다양한 도상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격자 안에는 가족을 소재로 한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

### 화려한 색채의 변주로 화면 전체를 역동적인 시각적 자극 요소로 채워

그의 가족이야기는 화려한 색채의 변주로 화면 전체를 역동적인 시각적 자극의 요소로 채우고 있다. 때로는 단색 톤으로 가족 모티프를 다루기도 하는데, 이렇게 단색으로 처리한 화면 속에서도 다양한 형상과 서사 구조가 들어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평생을 가족 모티프로 일관하면서 다색과 단색, 무채색과 유채색, 화려함과 단순함 등의 변주를 거쳐오면서도 일관되게 형상미술 화풍을 유지해 왔다. 그의 변화는 주로 색과 연관이 있다. 회색시대, 녹색시대, 모노크롬시대 등으로 1970년대 이후 10년 주기의 변화를 거쳐왔다.



국회 본관 사무실에 걸려 있는 황영성의 '가족이야기'

1970년대에는 초가집을 다루면서 채색을 줄인 구상 미술을 주로 했다. 녹색시대에는 마을을 이룬 초가집들의 형상으로 가족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모노크롬시대를 펼친 1990년대 이후에는 다채로운 색채를 다루되 한 화면 안에서는 단색조를 유지하는 식이었다. 이 시기부터는 형상을 보며 더 단순화하여 어떤 부분에서는 추상적인 형태에 가까워보일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보일 정도로 압축한 이러한 형상들은 그러나 끝내 가족이라는 서사와 그 서사를 뒷받침하는 형상들을 포기하거나 놓쳐버리지는 않았다. 노년의 황영성은 점점 더 단순한 추상의 의지를 화면에 담고 있다.

### 가족 이야기를 전 지구의 인류와 못 생명체의 넓은 틀로 확장

자신이 평생을 천착해 온 가족 이야기를 전지구의 인류와 못 생명체에 이르는 보다 넓은 틀로 확장해온 것이다. 1990년에 1년간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들과의 접

촉은 그를 크게 변화시켰다. 인디언의 삶과 문화를 접하면서 그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작했다. 인간과 동물과 식물 등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유로 확장한 것이다. 소와 가족을 주제로 시작한 그의 작업은 광주에서 자라는 향토적 서정과 연관을 맺었으나 광주에 발디딘 지구인으로서 사유와 감성을 넓혀나간 결과이다.

황영성은 자신이 평생을 추구해 온 주제에 대해서 “가족 이야기는 바로 사람들의 역사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궤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가족 이야기는 그리움으로부터 비롯한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그가 전쟁을 거치면서 겪은 아픈 가족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는 성장기 때부터 오붓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며 자랐다. 소박한 초가집에 사는 ‘농부와 아내, 어린아이들, 큰 눈의 소, 활개치는 닭과 개들, 그리고 초가지붕의 박 넝쿨, 뒷동산, 거기에 걸려있는 초승달까지’ 황영성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가족의 삶을 동경하며 자란 사람이다.

그가 평생을 추구해온 ‘가족이야기’ 연작의 변주는 단순히 그림의 양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삶을 지배해 온 가족에 대한 사유의 변화가 담긴 것이다. 인간과 동물, 식물 나아가 사물에 이르기까지 만물이 모두 다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담은 황영성의 작품세계는 분단체제의 상처를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와 우주의 문제로 풀어낸 것이다.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은 대인접물(待人接物)을 설파했다. 하느님을 모시라는 시천주(侍天主) 가르침을 넘어 하느님과 사람과 사물을 공경하라는 삼경(三敬)의 가르침. 가족 이야기를 못 생명과 만물로 확장한 황영성의 예술이 나아가는 길이다. 🍵

글 김준기(미술평론가·광주시립미술관장)



## 봄밤에 더욱 아름다운 국회

벚꽃축제가 열리던 4월 초에 방문한 윤중로에서 조명으로 더욱 아름다운 국회의사당을 담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봄밤처럼 아름다운 국회, 아름다운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이낭희(서울시 마포구)

##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인식과 논의는 언제부터?

### 저출산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과 법 제정

19세기부터 산업화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급속하게 낮아지자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만들었고, 같은 해 국회도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상정됐으나 해를 넘겨 2005년 5월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제17대 제253회 제4차(2005.5.4.)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참고로 이 특위 구성결의안은 이종걸 위원, 남경필 위원이 서면동의해서 지난 정기국회 중인 2004년 11월 25일 제안설명과 질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7대 제253회 제10차(2005.5.4.) 본회의>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존경하는 임태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임태희 운영위원회 임태희 의원입니다. (……)

첫째,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고령화 진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병행하여 곧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희태 (……) 투표 결과는 재석 220인 전원 찬성으로서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2005년 저출산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을 의결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 법의 제정으로 대통령 직속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되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 <제17대 제253회 제8차(2005.4.26.) 본회의>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기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기우 (……) 수원 권선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동 법안은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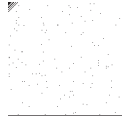
○의장 김원기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명칭

2005년에 처음 구성됐던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총 네 번의 회의를 개최해 공청회와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두 번 구성됐고, 관련부처 업무보고 및 법률안 개정을 위해 총 여



덟 차례의 회의가 있었다. 제20대국회에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2016년 7월 2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활동기간 중 관계기관 업무보고와 다섯 번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실시했다.

**<제17대 제254회 제1차(2005.6.28.)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배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비롯해서 고령화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제18대 제278회 제1차(2008.10.2.)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현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대책을 세워서 편안한 노후 보장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20대 제344회 제1차(2016.7.21.)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위원장으로 선임된 나경원입니다. (……)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젠다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갖고 우리가 국회에서 이 특위에서 존경하는 여아의 대단하신 역할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출산 위원장으로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목에 명시되고 그렇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명칭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저출산 관련 특별위원회 명칭을 보면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17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18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20대) 등 이렇게 유사하게 이어져 왔는데

제21대국회에서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8인으로 구성된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제1차(2023.2.14.)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고, 제2차(2023.3.31.) 회의에서는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5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21대 제403회 제1차(2023.2.14.)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28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인 0.81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년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말 오랫동안 주민들 생활 속에서 접하고 또 지방정부의 경험도 가지신 분들이 좀 구체적인 대안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출생·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입법이 마련되면 좋겠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 관련 기념일이 유난히 많은 가정의 달 5월,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가 인구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

글 김은경 속기사무관(의사국 의정기록2과)

#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잠기다

강화 함허동천



마니산 정상에서 본 강화도 전경



우리나라에서 기(氣)가 센 산을 꼽아 보라면 월출산과 계룡산을 들 수 있다. 모두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명산이다. 이 산들에 비해 체구는 작지만 기가 세기로는 전혀 뒤지지 않는 산이 하나 더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자리한 ‘마니산’이다.

강화섬에서 으뜸이라고 하지만, 마니산의 높이는 해발 472m로 월출산(809m), 계룡산(845m)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국에서 가장 기가 센 땅으로 손에 꼽는 것은 이 산 고유의 신비로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이 마니산 정상 참성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전설 같은 역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해마다 개천절 행사가 열리고 전국체전 성화가 채화되고 있다.

마니산의 센 기를 대변해주는 일화도 여럿이다. 풍수가들은 마니산이 남쪽 한라산과 북쪽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같은 ‘한반도의 배꼽’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가 분출하는 곳으로 보고 있다. 전국의 기가 모이는 혈자리라는 것. 1999년 풍수전문가들이 모여 전국의 기가 센 지역을 선정해 지기(地氣)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 마니산 참성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를 분출하는 생기처(生氣處)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야기도 회자된다. 1972년 우주선 아폴로 16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다. 선장인 존 영과 켄 매팅리, 찰스 듀크 등 세 명의 우주인이 지구를 내려다보니 유난히 서기(瑞氣)가 뻗치는 곳이 있어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지구에 귀환한 뒤 그 위치를 확인했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의 강화도 마니산 일대였다고 한다.

우주인들도 인정(?)한 마니산의 좋은 기운을 받고자 강화도로 향한다. 산행은 크게 주등산로인 계단로와 단군로, 그리고 반대쪽인 함허동천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



너럭바위에는 한자로 새긴 ‘함허동천’(涵虛洞天) 네 글자가 있다.

상방리 마니산 입구에서 시작되는 단군로와 계단로는 정상까지 오르는 최단 코스여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 원점 회귀까지 대략 3시간 남짓에 불과하지만, 산행이거보다는 역사 유물을 찾아가는 답사에 가깝고 계단이 많아 좀 지루한 편이다.

이에 비해 함허동천을 들머리로 해서 올라가는 길은 시간은 1시간 이상 더 걸리지만 마니산의 비경을 감상하며 암릉산행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다.

## 공룡의 등뼈를 연상시키는 거친 암릉길

마니산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함허동천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 코스는 함허동천에서 참성단을 찍고 원점 회귀하거나 참성단을 거쳐 상방리 마니산 입구 쪽으로 하산할 수 있으며, 산행은 대략 4시간 잡으면 된다.

마니산은 해발고도가 높지 않지만 그렇게 만만한 산은 아니다. 육지와 달리 섬에서는 해수면 가까이에서 산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높이는 훨씬 높다. 게다가 함허동천을 들머리로 해서 정상으로 오르는 암릉코스로 다소 급하고 거칠다.

출발은 함허동천 야영장이다. 먼저 이름에서부터 멋짐이 풍기는 ‘함허동천’(涵虛洞天)이란 4글자의 뜻을 찾아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잠겨 있는 곳’이란 다. 마니산의 서쪽 기슭에 펼쳐진 이 계곡은 빼어난 산세를 자랑한다. 200여 미터나 되는 거대한 너럭바위 위로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풍광에 전국 제일의 야영장으로 이름 높다.



공룡의 등뼈처럼 이어진 바위능선

청량감을 주는 물소리를 따라 계곡을 오르다 보면 커다란 너럭바위에 함허대사가 쓴 ‘涵虛洞天’ 글자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야영장 끝에 다다르면 본격적인 등산로다. 가파른 숲길이 이어지고 기울어진 바윗길을 오르면 정수사와 마니산 정상으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타난다. 이정표를 따라 참성단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바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조금씩 경사가 급해져서 발걸음이 다소 무겁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야가 트이면서 본격적인 암릉길이 시작된다. 이곳에서부터 참성단까지 이어진 1km의 암릉 코스는 마니산 등반의 백미다. 아기자기하면서도 거칠고 아찔하다.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서해 바다의 시원한 풍광이 펼쳐지고, 다른 한쪽으로는 산 아래 넓은 들판 너머로 끝없는 갯벌이 이어진다. 강화도, 특히 함허동천 암릉길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눈앞으로 길게 이어진 암릉은 정상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능선을 따라 툭툭 튀어오른 모습이 마치 공룡의 등뼈를 닮은 듯하다. 그 풍경을 두고 혹자들은 “강화도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산다”며 실없는 농을 던진다. 그렇게 공룡의 꼬리를 타고 조심조심 머리 쪽을 향해 걸어간다. 바위능선 양옆으로는 아찔한 절벽이다. 곳곳에 위험 경고판이 서 있다.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 넋을 놓았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 참성단을 지키는 150살 소사나무

바위능선 끝은 마니산 정상이다. 긴 통나무에 한자로 ‘摩尼山’이라고 쓴 표지목이 이채롭다. 이곳은 마니산은 물론 강화도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다. 강화도가 한눈에 조망되는데, 산과 바다, 갯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은 너무 황홀해 잠시 숨을 멈추게 한다. 맑은 날에는 북쪽으로 개성의 송악산도 보인다.



마니산 정상에서 바라본 참성단

이곳은 서해 최고의 낙조 명소로도 유명하다. 시간을 잘 맞춰 일몰 때 정상에 서면 햇살에 부서지는 서해 바다의 은빛 물결과 붉은 낙조가 어우러지는 가슴 진한 감동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태양은 금세 바다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일몰 뒤엔 하산길을 서둘러야 한다.

마니산의 상징과도 같은 참성단은 정상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단군의 흔적이 실제로 남아 있는 신비로운 장소다. 단군은 기가 가장 센 이곳에 자연석을 다듬어 제단을 쌓은 뒤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그 전통이 이어져 성화 채화로 이어지고 있다.

참성단 돌단 위로는 아름다운 자태의 소나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산기슭에 자생하는 우리나라 토종나무다. 이 나무는 누가 일부러 심어 키운 것인지, 지나는 새들이 씨앗을 물어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흙 한 줌 없는 돌 틈에 뿌리를 내리고 150년 넘는 세월 동안 모진 풍파를 이겨냈다. 그 모습은 우

리나라에 살아 있는 소나무 가운데서 가장 크고, 사방으로 고르게 가지를 뻗어 위풍당당하여 200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을 정도다. 소나무는 이제 참성단을 지키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가 됐다.

하산길은 되돌아 다시 암릉을 타고 함허동천으로 원점 회귀하거나, 좀 수월하게 계단길이나 단군로를 따라 마니산 입구로 내려가도 된다. 📍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서울에서 강화터미널을 오가는 직행 좌석버스를 이용한다. 서울 신촌역에서 3000번 버스를 타면 염창역, 발산역, 김포를 거쳐 강화터미널까지 갈 수 있다. 여기에서 군내버스를 타면 30분 정도 걸려 함허동천 입구에 도착한다.



서울을 기준으로, 김포공항 방면 올림픽대로 → 김포한강로 → 356번 지방도 → 초지대교 → 장흥저수지 → 함허동천야영장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만드는 어조의 변화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다. 살아 가다 보면 서로 실수하기도 하고 오해도 하지만, 이런 상황이 말 한 마디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경우를 자주 보고 듣는다. 의사소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말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자주 등장하는 것 역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을 배우고 쓰면서도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잘 모른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안내판이 걸려 있다. 여기에 적혀있는 안내문을 읽어 보면 무슨 내용을 전달하려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은 분량으로 많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려다 보니 문법 규칙에 어긋나는 문장이나 구절을 자주 발견한다. 규칙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무엇을 말하려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말을 공부하는 처지라서 그런지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최근 어떤 도서관에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방문했더니 입구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가. 1층 자료실로 가시면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누구나 알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안내문은 다음의 두 문장을 합친 것이다. 주어가 생략되었으므로 괄호 안에 주어를 넣어서 보이기로 한다.

가-1. (방문자께서는) 1층 자료실로 가십시오.

가-2. (그러면 방문자께서는)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

가-1 문장은 주어가 생략되었을 뿐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가-2를 보면 방문자라는 주어에 ‘가능하다’라는 서술어가 호응되어 있다. 주어가 사람인데다 열람과 복사라는 구체적 행위를 안내하는 문장이므로 주체의 행동을 표현하는 능동적인 동사가 서술어로 와서 호응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나. 1층 자료실로 가시면 열람과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가)에 비해 분량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어조도 훨씬 정중한 느낌이 든다.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확한 의미 전달과 함께 부분적으로 어조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조의 변화에 간여하는 자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의미에 맞는 단어를 골라서 문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문장의 호응 관계만으로도 의사소통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언론매체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일상 언어가 마치 거름망 없이 마구 쏟아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한다. 이런 현상 탓인지 비문도 자주 보이고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되지 않는 문장을 자주 만난다. 공적 언어 공간에서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말을 더욱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말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국회 ART GALLERY 5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Memory of Mirror

2023. 5. 1. - 5. 15.

작가 : 김묘빈 | 추천 : 최종윤 의원실



## 낮선 공간이 주는 위로

2023. 5. 16. - 5. 30.

작가 : 이계숙 | 추천 : 이수진 의원실

## 국회, 선거제 개선안 논의 등을 위한 전원위원회· 4년 만의 국회개방행사 개최

|        |                                                                                                                                                                                          |
|--------|------------------------------------------------------------------------------------------------------------------------------------------------------------------------------------------|
| 4월 1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진표 국회의장,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제주가 4·3의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회가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혀</li> </ul>                                      |
| 4월 3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li> <li>국회, 본회의를 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 의결</li> </ul>                                                         |
| 4월 4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li> </ul>                                                                            |
| 4월 6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li> <li>4·5재보궐선거에서 전북 강성희 진보당 후보(전북 전주을) 당선. 진보당 첫 국회 입성</li> </ul> |
| 4월 8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4년 만의 국회 개방행사 개최</li> </ul>                                                                                                                   |
| 4월 1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4일간 선거제 개선안 논의 등을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li> <li>김진표 국회의장, 유재욱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여야 협치 당부</li> </ul>                                                 |
| 4월 12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야 원내대표,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법안 논의했으나 합의 불발</li> <li>여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관련 질타</li> </ul>                           |
| 4월 14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홍 교육위원장, 정순신 변호사와 그 가족이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 불참석한 데 대해 “위원 3분의 1 연서로 검찰청에 고발할 것” 이라고 밝혀</li> </ul>                                                      |
| 4월 16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의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됐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li> </ul>                                                   |
| 4월 17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li> </ul>                                                                                          |
| 4월 18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야,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한목소리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li> </ul>                                                                                     |
| 4월 19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진표 국회의장, 4·19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5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li> </ul>                       |
| 4월 2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의힘, 4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관철하겠다고면서 야당에 ‘민생입법 우선처리’에 동참하라고 촉구</li> <li>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이태원 헬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발의</li> </ul>           |
| 4월 23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당과 정부·대통령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li> </ul>                                                                                             |
| 4월 24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윤석열 대통령,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 국민 방문</li> </ul>                                                                                                          |
| 4월 26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li> <li>국회의장·국무총리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 국회 중앙홀에서 열려</li> </ul>                                                                    |

정리 윤성혜

#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 국회방문객이 찍은 국회 사진 공모

- 주제** 국회의 풍경
- 참가자격** 국회를 방문한 사람 누구나
- 내용** 사진과 촬영이유, 사진설명
  - 국회의 풍경이나 국회를 찾은 방문객, 국회 실내 모습 등의 사진과 짧은 설명(2~3문장)
- 응모방법**
  - 휴대폰으로 촬영(촬영 날씨가 보이게)
  - 사진 및 설명, 연락처를 이메일로 제출 (book@assembly.go.kr)
- 마감** 매달 20일
- 규격** 가로·세로 3000픽셀 이상 용량의 JPG, JPEG 파일형식 원본 창작사진 (디지털 합성 등 수정 변형불가)
- 시상** 선정 시 원고료 10만 원
- 문의**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058)

- 매월 1편씩 선정하여 국회 월간지 국회보에 게재 예정.
- 응모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선정 이후라도 표절, 타 공모전 입상작품 등 이유로 저작권 문제 발생시 선정 취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